

정책엑스포 2017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행사 일정

2017. 3. 16 (목) 09:40 ~ 17:10

장소 시간	제 1 회의실 (세종시청 509호 대회의실)	제 2 회의실 (세종시청 517호 집현실)
09:40	개회식	
10:00	세종혁신도시포럼, 세종지역산업기획단 세종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	
13:20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행복 I : 지속가능한 성장	대전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15:20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신문화재단 시민행복 II : 질 좋은 시민의 삶	지방분권형개헌연구TF,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지방분권형 개헌

2017. 3. 17 (금) 10:00 ~ 18:00

장소 시간	제 1 회의실 (옛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	제 2 회의실 (옛충남도청 2층 소회의실)	제 3 회의실 (대전세종연구원 2층 대회의실)
10:00	인사말		
10:20	미래먹거리신성장동력연구TF, 경제활력 포럼, 대전상공회의소, 대전개발위원회, 대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	시민주권옴도시연구TF, 한국NGO학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주권도시와 시민운동	한국정치학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I : 국가균형발전의 이론과 현실
13:20	대전세종상생포럼, 한국지역경제학회,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충청권 신성장동력과 상생협력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학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한국정치학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II : 지방자치분권의 이론과 현실
15:25	대전청년네트워크(대청넷), 대전경제통상 진흥원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세종연구원 경제교육센터 청년대전을 위한 정책배틀	과학도시포럼, 도시재생포럼, 서울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과학도시연구센터,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대도시의 재탄생 : 전환과 재생	한국정치학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III : 균형발전·지방분권의 과제와 대안
17:30	제21회 미래기획포럼 : 미래한국, 희망경제 스피치 : 박 승(전 한국은행 총재)		

장소 시간	제 4 회의실 (대전세종연구원 1층 회의실)	제 5 회의실 (대전세종연구원 2층 소회의실)	제 6 회의실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	제 7 회의실 (대전세종연구원 4층 소회의실)
10:00				
10:20	희망정책네트워크, 대전세종상생연구협의회 새로운 정부의 지방정책 I	희망정책네트워크 시민행복정책 I	희망정책네트워크 국민희망정책 I	희망정책네트워크 사회통합정책 I
13:20	희망정책네트워크, 대전세종상생연구협의회 새로운 정부의 지방정책 II	희망정책네트워크 시민행복정책 II	희망정책네트워크 국민희망정책 II	희망정책네트워크 사회통합정책 II
15:25	희망정책네트워크, 대전세종상생연구협의회 새로운 정부의 지방정책 III	희망정책네트워크 시민행복정책 III	희망정책네트워크 국민희망정책 III	희망정책네트워크 사회통합정책 III

<p>09:40 — 제1회의실</p>	<p>개회식 개회사 :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 축 사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축 사 :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p>
<p>10:00 — 제1회의실</p>	<p>세종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 주 관 : 세종혁신도시포럼, 세종지역산업기획단 사 회 : 황희연(충북대) 발 표 : 1. 세종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육성 / 안아람(세종지역산업기획단) 2. 세종시 행정과 지식산업 리빙랩 전략 /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세종지역 발전정책 비전 및 전략 / 왕광익(국토연구원) 토 론 : 안찬영(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선배(산업연구원), 류기철(충북대), 박정호(한국개발연구원), 오용준(충남연구원), 김성표(대전세종연구원)</p>
<p>11:50</p>	<p>식당 이동</p>
<p>13:20 — 제1회의실</p>	<p>시민행복 I : 지속가능한 성장 주 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 인사말 : 임효림(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사 회 : 임승달(세종시 정책자문위원장) 발 표 : 1. 도농통합적 세종시 발전 방안 / 김정연(충남대) 2. 세종시 도시재생사업과 공동체 발전 방안 / 김동호(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장) 3. 세종시 자연환경 현황 및 정책 제언 / 이은재(대전세종연구원) 토 론 : 박영송(세종시의원), 백운석(중도일보 세종본부장), 김성수(세종시 청춘초지원과장), 박정은(국토연구원), 김문옥(광덕산환경교육센터), 남영숙(한국교원대)</p>
<p>15:10</p>	<p>휴식</p>
<p>15:20 — 제1회의실</p>	<p>시민행복 II : 질 좋은 시민의 삶 주 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시문화재단 사 회 : 정환영(공주대) 발 표 : 1. 세종시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제 /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2.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의 발전 전략 / 김수경(우송정보대) 3. 세종시 문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 문경원(대전세종연구원) 토 론 : 김복렬(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현정(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관률(충남연구원), 유도일(충북대), 임재일(공주대), 김혜옥(세종시문화재단)</p>
<p>17:10</p>	<p>마침</p>

13:20
—
제 2회의실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주 관 : 대전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인사말 : 정초시(충북연구원장)

사 회 : 강현수(충남연구원장)

- 발 표 : 1.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
금홍섭(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한남대)
2. 세종시 광역도시권 기능강화 전략 / 이경기(충북연구원)
3. 행정수도 세종의 중장기 발전 방안 / 백기영(유원대)

토 론 : 김수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상호(한밭대), 송두범(충남연구원),
성현곤(충북대), 정재희(홍익대), 임병호(대전세종연구원)

15:10

휴식

15:20
—
제 2회의실

지방분권형 개헌

주 관 : 지방분권형개헌연구TF,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인사말 : 김 욱(지방분권형개헌연구TF 팀장, 배재대)

사 회 : 윤성식(전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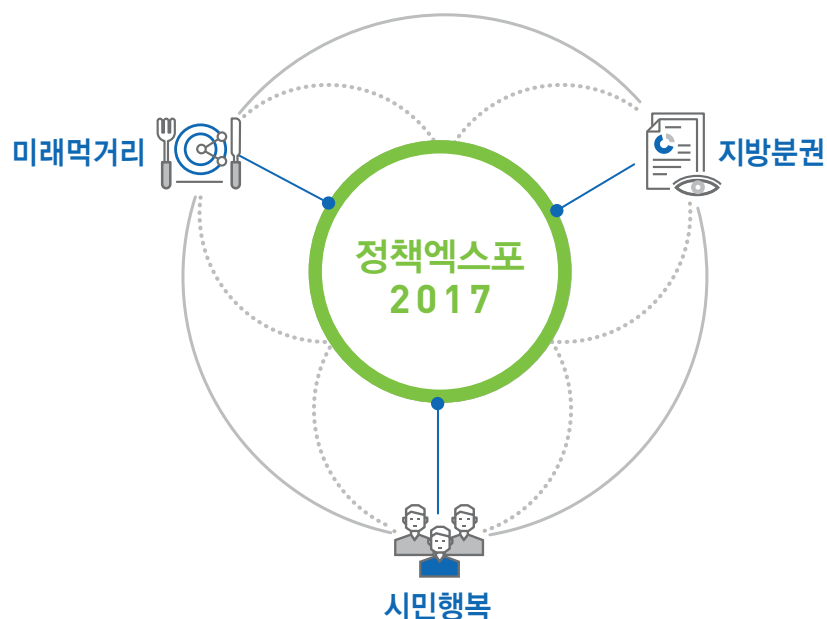
- 발 표 : 1. 지방분권형 개헌과 세종시의 헌법적 위상 / 신희권(충남대) · 임현만(배재대)
2. 선진국가 지방분권의 제도와 운영 / 윤기석(충남대)
3.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

김성호(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위원장, 자치법연구원)

토 론 : 김수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영진(대전대), 김용복(경남대),
임성진(전주대), 차재권(부경대), 최길수(대전세종연구원)

17:10

마침



10:00 — 제 1회의실	인사말 인사말 :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 환영사 : 김경희 희망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 축 사 :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축 사 : 김경훈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10:20 — 제 1회의실	대전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 주 관 : 미래먹거리신성장동력연구TF, 경제활력포럼, 대전상공회의소, 대전개발위원회, 대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사 회 : 강병주(미래먹거리신성장동력연구TF 공동대표, 한남대) 발 표 : 1. 대전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의 방향과 과제 / 강영주(대전세종연구원) 2.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비전과 전략 / 심진보(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대덕특구 재도약의 전략과 과제/ 고영주(한국화학연구원) 토 론 : 이은권(국회의원), 송인암(대전대), 김영수(산업연구원 소장), 김중환(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윤석무(대전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영빈(대전시 과학특구과장)
12:10	식당 이동 오찬사 :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
13:20 — 제 1회의실	충청권 신성장동력과 상생협력 주 관 : 대전세종상생포럼, 한국지역경제학회,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인사말 : 금홍섭(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한남대) 사 회 : 이춘근(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 발 표 : 1. 대전세종 신성장동력과 상생협력/ 임성복(대전세종연구원) 2. 충북지역의 신성장동력 / 윤영한(충북연구원) 3. 충남지역의 신성장동력 / 김양중(충남연구원) 4. 충청권 신성장동력과 상생발전 / 황희연(충북대) 토 론 : 김종민(국회의원), 김일순(충청투데이), 김일태(전남대), 이웅호(경남과기대), 김기희(대전세종연구원)
15:10	휴식
15:25 — 제 1회의실	청년대전을 위한 정책배틀 주 관 : 대전청년네트워크(대청넷),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세종연구원 경제교육센터 사 회 : 권선택(목원대) 주 제 : 2017 청년대전 정책아젠다 토 론 : 청년 77명 <진행순서> 1. 대전시 청년정책 우선순위 제안 2. 청년정책 우선영역 탐색 3.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17:15	휴식
17:30 — 제 1회의실	제21회 미래기획포럼 : 미래한국, 희망경제 스피치 : 박 승(전 한국은행 총재)
18:00	식당 이동 만찬사 : 정교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10:20

제 2회의실

시민주권도시와 시민운동

주 관 : 시민주권으뜸도시연구TF, 한국NGO학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사말 : 이동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사 회 : 박재묵(대전시민행복위원장, 충남대)

발 표 : 1. 시민주권 시대와 주권의 재편 / 박상필(한국NGO학회 회장, 성공회대)
2. 시민주권도시 국내외 사례 / 장수찬(목원대)
3. 시민주권으뜸도시의 대전시 적용 방안 / 권선희(목원대)

토 론 : 최선희(대전시의원), 이무성(녹색대), 이종식(아주대), 심규상(오마이뉴스),
문상훈(대전시 인권담당),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2:10

식당 이동

오찬사 :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

13:20

제 2회의실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주 관 :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학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인사말 : 김혜경(한국여성학회 회장, 전북대)

사 회 : 문경희(창원대)

발 표 : 1.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 담론과 과제 / 이해숙(경상대)
2. 여성 정치세력화의 현황과 과제 : 총선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김경희(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임정규(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지방자치위원장)
3. 양성평등 지방자치와 남녀동수 기초의회제 : 타당성 및 과제 /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토 론 : 박정현(대전시의원), 신상숙(서울대), 이한태(충남대),
김진화(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교육위원장),
이은파(연합뉴스 대전충남취재본부장),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15:10

휴식

15:25

제 2회의실

대도시의 재탄생 : 전환과 재생

주 관 : 과학도시포럼, 도시재생포럼, 서울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과학도시연구센터,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사말 : 고영주(과학도시포럼 공동대표, 한국화학연구원)

사 회 : 황혜란(대전세종연구원)

발 표 : 1. 대도시의 스마트 리전(Smart Region) 구축 전략 : 대전·세종 사례 /
이상호(한밭대)
2. 시민문화권과 문화시민도시 전략- 서울시 사례 / 백선희(서울연구원)
3. 대도시의 창조인력 유인을 위한 도시장소 특화 전략 : 부산시 사례 /
박상필(부산발전연구원)
4. 지역자원과 도시공간 선순환을 위한 사회적경제 실현 방안 : 광주시 사례 /
민현정(광주전남연구원)

토 론 : 전문학(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석봉(대덕넷), 이승욱(KAIST),
성기문(대전시 도시재생과장), 염인섭(대전세종연구원 과학도시연구센터장)

<p>10:20 — 제 3회의실</p>	<p>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I : 국가균형발전의 이론과 현실</p> <p>주 최 : 한국정치학회</p> <p>인사말 : 진영재(한국정치학회 회장, 연세대)</p> <p>사 회 : 김용철(전남대)</p> <p>발 표 : 1. 신자유주의, 신발전국가와 국가균형발전 : 균형발전의 이론적 논의 / 한정택(연세대)</p> <p>2.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성찰 / 차재권(부경대)</p> <p>3. 지역혁신체계와 혁신도시 정책의 평가/ 장혜영(중앙대)</p> <p>토 론 : 정상호(서원대), 민병기(충남대), 라미경(순천향대), 최정진(한남대), 김은경(경기연구원), 박현석(KAIST)</p>
<p>12:10</p>	<p>식당 이동</p> <p>오찬사 :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p>
<p>13:20 — 제 3회의실</p>	<p>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II : 지방자치분권의 이론과 현실</p> <p>주 최 : 한국정치학회</p> <p>사 회 : 강원택(서울대)</p> <p>발 표 : 1. 지방자치분권의 두 갈래 길 : 신중세 vs 신중앙집권화 / 전용주(동의대)</p> <p>2. 한국 지방자치분권 제도의 발전과 과제 : 제도와 관습 / 김덕진(충남대)</p> <p>3. 거버넌스 지향의 새로운 지방정치 권력구조 : 강시장형에서 의회주도형으로 / 이재현(충남대)</p> <p>토 론 : 김재한(한림대), 류재성(계명대), 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 임성학(서울시립대), 정연정(배재대), 이동윤(신라대)</p>
<p>15:10</p>	<p>휴식</p>
<p>15:25 — 제 3회의실</p>	<p>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III : 균형발전 · 지방분권의 과제와 대안</p> <p>주 최 : 한국정치학회</p> <p>사 회 :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고려대)</p> <p>발 표 : 1.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에 있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문제 / 김용복(경남대)</p> <p>2. 지역조정제와 국가균형발전 : 해외 사례의 한국적 적용 / 김영태(목포대)</p> <p>3.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대도시 광역 거버넌스 구축 / 박재욱(신라대)</p> <p>토 론 : 윤 황(선문대), 황아란(부산대),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이기완(창원대), 지충남(전남대), 황태연(성균관대)</p>

10:20

제 4회의실

새로운 정부의 지방정책 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대전세종상생연구협의회

인사말 : 김영진(희망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 대전대)

사 회 : 안성호(대전대)

- 발 표 : 1. 새로운 정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의 지방정책 / 김 옥(배재대)
2. 새로운 정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지방정책 /
원구환(한남대) · 최길수(대전세종연구원)
3. 새로운 정부 교육부의 지방정책 / 박상옥(공주대)
4. 새로운 정부 법무부의 지방정책 / 김영진(대전대)

토 론 :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봉규(공사),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12:10

식당 이동

오찬사 :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

13:20

제 4회의실

새로운 정부의 지방정책 I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대전세종상생연구협의회

사 회 : 김의섭(한남대)

- 발 표 : 1. 새로운 정부 기획재정부의 지방정책 / 조연상(목원대)
2. 새로운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방정책 / 김성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새로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방정책 / 박종찬(고려대)
4. 새로운 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지방정책 / 임윤택(한밭대)

토 론 : 조임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지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윤수(산업연구원), 이정범(대전세종연구원)

15:10

휴식

15:25

제 4회의실

새로운 정부의 지방정책 II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대전세종상생연구협의회

사 회 : 안정선(공주대)

- 발 표 : 1. 새로운 정부 고용노동부의 지방정책 / 최효철(대전대)
2. 새로운 정부 보건복지부의 지방정책 / 류진석(충남대)
3. 새로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정책 / 박찬인(충남대)
4. 새로운 정부 환경부의 지방정책 / 김선태(대전대)
5. 새로운 정부 여성가족부의 지방정책 / 김경희(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공동대표)

토 론 : 장기영(한국고용정보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돌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환도(대전세종연구원)

<p>10:20 — 제 5회의실</p>	<p>시민행복정책 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인사말 : 민윤기(시민행복정책 연구팀장, 충남대) 사 회 : 김태명(한남대) 발 표 : 1. 대전세종 도시교통정책 / 김명수(한밭대) 2.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기관 활력 방안 / 맹수석(충남대) 3. 지방정부와 정부출연연구원과의 협력 방안 / 남승훈(한국표준과학연구원) 토 론 : 이진선(우송대), 이범규(대전세종연구원), 김영철(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성상(목원대)</p>
<p>12:10</p>	<p>식당 이동 오찬사 :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p>
<p>13:20 — 제 5회의실</p>	<p>시민행복정책 I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사 회 : 김대원(대전대) 발 표 : 1. 지역대학과 지방정부 간의 상생협력 / 민윤기(충남대) · 유병선(대전세종연구원) 2.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 김영두(충남대) 3. 건강한 사이버 세상이 주는 시민행복과 교육 / 김용원(건양대) 4. 사회문화예술의 발전 방안 / 류철호(건양대) · 임재일(공주대) 토 론 : 김정겸(충남대), 정경석(대전세종연구원), 김윤수(KT&G연구원), 전나진(한남대)</p>
<p>15:10</p>	<p>휴식</p>
<p>15:25 — 제 5회의실</p>	<p>시민행복정책 II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사 회 : 차재영(충남대) 발 표 : 1. 문학의 선진화 : 국제화를 중심으로 / 송기한(대전대) 2. 시민스포츠 행정의 공공부문 확대 방안 / 이종영(대덕대) · 임종호(대전대) 3. 시민건강 증진 방안: 연령대별 체력 측정을 중심으로 / 김한수(건양대) · 엄현섭(건양대) 4. 반려동물문화 정착 방안 / 정주영(충남대) 토 론 : 김정숙(충남대), 김정희(단국대), 이형복(대전세종연구원), 김종만(대전동물메디컬센터 숲 대표원장)</p>

10:20
—
제 6회의실

국민희망정책 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인사말 : 남수중(희망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 공주대)

사 회 : 허성우(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 발 표 : 1. 출산 장려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으로 / 윤자영(충남대)
2. 사회적 재생산 관점에서 성평등정책의 방향 / 류유선(대전세종연구원)
3. 문화로 행복한 한국사회를 위하여 / 김창수(대전대) · 한상현(대전세종연구원)
4. 생태민주화와 정의로운 전환 / 김종남(대전시민사회연구소)
5.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 : 구성요소와 구축조건 / 전영훈(대전대)

토 론 : 이갑숙(대전시 성평등기획특별보좌관), 임우연(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기자(목원대), 이재근(대전세종연구원)

12:10

식당 이동

오찬사 :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

13:20
—
제 6회의실

국민희망정책 I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사 회 : 정용길(충남대)

- 발 표 : 1. 한국의 경제성장 과제 / 조복현(한밭대)
2. 내생적 혁신체제로의 전환 / 이덕희(KAIST)
3. 최근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정책의 모색 / 남수중(공주대)
4. 저성장·양극화 시대의 바람직한 조세재정 정책 / 정세은(충남대)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 / 안기돈(충남대)

토 론 : 오종석(산업연구원), 김장훈(충남대), 이병채(충남대),
문충만(대전세종연구원)

15:10

휴식

15:25
—
제 6회의실

국민희망정책 II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사 회 : 이문지(배재대)

- 발 표 : 1. 2017 시대정신 :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제언 / 김종법(대전대)
2. 불확실성 시대의 복합 대응 / 고봉준(충남대)
3.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행정 개혁과제 /
금홍섭(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한남대)
4. 사법개혁과 헌법원리의 실현 :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 김응규(충북대)
5. 교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확대 / 허창수(충남대)

토 론 : 백준기(한신대), 홍기준(경희대), 박찬표(목포대), 김 민(순천향대)

10:20

제 7회의실

사회통합정책 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인사말 : 신희권(사회통합정책 연구팀장, 충남대)

사 회 : 김용동(대전세종연구원)

- 발 표 : 1. 대전세종 로컬거버넌스 강화 방안 / 신희권(충남대)
2. 대전 비주력산업 분야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은 웅(한남대)
3. 지역사회와 과학기술 통합을 위한 연구개발 / 김소영(KAIST)
4.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한 공동거주 정책 / 최문정(KAIST)

토 론 : 김수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형준(충남대),
김민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남석(대전세종연구원)

12:10

식당 이동

오찬사 : 김영호 배재대학교 총장

13:20

제 7회의실

사회통합정책 I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사 회 : 장창수(대전세종연구원)

- 발 표 : 1. 지역 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렴 임대주택 확충 방안 / 김 진(한남대)
2. 사회성과 연계 지원제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
유승민(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3.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슈머 도시 구축방안 / 임성진(전주대)
4. 친환경 대체교통수단의 확대 방안 / 남성집(한남대)

토 론 : 이재우(목원대), 김제선(풀뿌리사람들),
김정동(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대행), 이재영(대전세종연구원)

15:10

휴식

15:25

제 7회의실

사회통합정책 III

주 관 : 희망정책네트워크

사 회 : 정선기(충남대)

- 발 표 :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해소 방안 /
최인이(충남대) · 박노동(대전세종연구원)
2.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기술의 활용 방안 / 박혜경(충남대)
3. 한국 노동정책의 발전 방향 / 남기곤(한밭대)
4.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 이영미(한남대)

토 론 : 김도균(충남대), 이정림(대전세종연구원),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방은령(한서대)

■ 진행 순서

13:20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인사말 김혜경(한국여성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사회 문경희(창원대학교)

1. 이혜숙(경상대학교) 3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 담론과 과제”

2. 김경희(대전여성단체연합) · 임정규(대전여성정치네트웍) .. 41

“여성 정치세력화의 현황과 과제 :

발표

총선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3.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57

“양성평등 지방자치와 남녀동수 기초의회제 :

타당성 및 과제”

토론

박정현(대전시의원)

신상숙(서울대학교)

이한태(충남대학교)

김진화(대전여성정치네트웍)

이은파(연합뉴스)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15:10

휴식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 담론과 과제

이혜숙 (경상대)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담론과 과제

머리말 :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담론

정치세력화(political empowerment)란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성원들이 서로 연계하여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외상태에서의 탈출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제력을 획득해 가는 과정” (Bystydzinski, 1992: 3)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란 여성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차별적 문화나 사회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하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게 됨을 의미한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은 유권자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가? 단순한 선거권 행사를 넘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 의원의 수는 충분한가? 여성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실질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치문화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가? 여성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차별적인 제도에 맞서 저항하면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여성총리에 이어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또한 여성정치할당제의 법적 제도화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정치할당제는 실질적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을 증가시켜서 과거보다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성정치할당제로 인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전히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할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구 선출직의 경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김민정, 2017: 327). 또한 여성정치할당제를 통해 늘어난 여성 비례대표의 대표성이 연령, 직업, 지역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이재희 · 김도경, 2012) 이는 사회적 배제를 고려하지 않은 참여민주주의는 “귀족민주주의”(최일성, 2012: 209)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끼어들기는 했지만 새판 짜기는 안됨, 질적 세력화를 위한 대책 필요”(김금옥, 2014: 69)라는 지적이나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도 “여성의원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총선과정은 젠더 관점에서 최악의 선거 모습을 보여주었음”(권수현, 2016)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여성의 정치참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의 수적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많은 여성을 정치권에 진출시키는 문제와 함께 여성의 실질적인 대표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단순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제나 여성관련 쟁점에 대한 세력화, 사회전체를 성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방향으로의 여성운동의 대중화 등의 측면으로

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사회는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부정부패, 부의 양극화문제, 소통문제 등 정치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이슈화 과정에 여성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유권자 책임론, 여성후보의 경험부족과 능력시비,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등의 논란에 대한 적극적 대안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선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나? 여자가 나서서 왜 말이 많은가? 정치계에서 여성이 쓸모 있겠느냐?”(유병선, 2014) 등 여성을 폄하하는 말이 있는데 여성의 정치참여 당위성에 대한 보편적 담론을 개발해야 하고 사회적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담론은 사회를 움직이는 지식으로서 주체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권력의 방식이다(푸코, 1976: 35-53). 담론은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그 주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진행되었던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담론의 성격, 쟁점 등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¹⁾

담론 주체와 담론화 과정: 여성 정치세력화 운동의 흐름

여성이 정치적으로 저대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여성문제의 의제화와 정책적 해결을 막으며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외집단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를 차단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여성은 비정치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만들고 제도적, 문화적 개선을 위해 활동해 왔다. 여기에서는 담론 주체로서 여성 정치세력화 운동의 흐름을 정리해 본다.

여성운동단체는 여성운동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가치와 전략을 가진다. 이러한 가치와 전략들은 그 조직을 대표하는 담론으로 형상화되며 “담론을 만드는 것은 담론이 권력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권력에 저항하거나 권력을 형성하는 운동의 과정”(신영옥, 2011: 93)이 된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여성운동의 정치력도 강화되었다. 여성들도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여성이해의 정치쟁점화,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여성후보 발굴과 지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법 제정과 집행을 위해 활동하였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 성장한 여성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영향력의 정치’와 함께 직접적인 ‘참가의 정치’라는 이중전략을 실천해 왔다(오유석, 2008: 3).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명목적인 여성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 수준에 그칠 것

1) 이 글은 필자의 저서(이혜숙, 2016)에서 해당 부분을 주로 참조하였고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이 아니라 여성이 직접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대표에 의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선거 국면에서는 연대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해 왔다. 활동 내용을 보면 크게 선거제도 개혁운동과 당선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은 단체간 연대의 형식을 통해 여성을 조직화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정치할당제를 주장하면서 당선운동을 펼쳤다.

선거제도의 여성정치할당제 도입을 촉구했던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이하 ‘할당제 여성연대’ 라 함)는 1994년 8월에 결성되어 15대, 16대 총선과 1995년, 1998년,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할당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할당제여성연대는 1990년대 이후 정책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온 대표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여성단체의 연대 활동을 통한 참여확대 노력이었다.

그 후 정치관련 여성단체와 연구소들의 연대라 할 수 있는 ‘여성정치네트워크’와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의 활동이 있었는데 ‘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98년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1997년 12월에 결성된 것으로 할당제여성연대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단체는 후보자 발굴과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었고 특히 지방정치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자 정치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2003년 8월에 결성된 ‘총선여성연대’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현재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 3백여개의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정치개혁과 획기적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선여성연대’는 ‘할당제여성연대’와 ‘여성정치네트워크’의 활동을 계승한 것으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여성의 참여가 전반적인 정치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7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활동은 여성후보 발굴 작업인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결성한 것이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구체적으로 여성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102인의 여성후보 명단을 발표하였고 각 정당에 이 여성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요구하고 이들의 당선운동을 펼쳤으며 현역의원을 제외하고 신인 여성후보를 당에 추천하고 지원하는 작업을 하였다(남윤인순, 2005). 이는 이제까지 여성들의 정치권 진입이 개인적인 활동에 기반했던 것에 비해 17대에는 여성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보여 주었으며 여성의 정치분야에의 참여와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여성운동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들 연대활동이 주로 사용한 담론 확산 방법을 살펴보면 직접 정당을 방문해서 각 정당 대표들의 여성정치할당제 법제화 지지를 호소하거나 대외적인 집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운동과 유권자운동을 전개했다(김은희·김민정·오유석, 2013: 93-94). 여성후보지원활동은 성명서 발

표나 언론이나 방송매체에 대한 논평,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반 유권자에게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여성정책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17대 총선과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그 외 여성의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형성된 네트워크로는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 등을 들 수 있다.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는 2009년 11월 5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서 평등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여 각계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범여성계 연대조직이다. 출범 이후에는 ‘남녀동수참여’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선출직과 비례직을 포함하여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50% 및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 50% 여성참여’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단체별로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였다(김원홍·김은경, 2010: 40-41).

2012년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자들이 정치개혁이라는 기치 하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이슈화시킴에 따라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몇 주 전까지도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지방선거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정당공천제는 그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유력한 기제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라는 기제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적은 가운데 여성운동이 전개한 주요 활동은 성명서 발표를 통한 남녀동수 공천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치인 육성과 교육 활동,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 및 확대 노력, 여성후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등을 들 수 있다(김원홍·김인순·김은주, 2014: 53-58).

한국YWCA,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등 145개 단체는 2015년 7월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대표성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그 외 다수의 여성운동단체는 8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에 결합하면서 시민사회 내 정치개혁 움직임을 이끌었다(이진옥·김은주, 2015: 15-16).

지역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지역여성운동단체도 활동하고 있다. 2002년 창립한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나 2007년 1월 창립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의 활동처럼(오유석, 2008: 11)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이 지방자치 실현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지역여성운동단체들은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프로그램과 여성정치학교, 여성유권자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수준에서 다층화되고 다양화된 생활정치 운동을 펼치면서(서헌주·김경숙·송미영, 2010: 211)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했다.

여성 정치세력화 담론과 성격

일반적으로 여성과 정치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을 살펴보면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극복과 대의민주주의의 실현, 지연되는 여성문제의 의제화와 정책적 해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를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시대, 생활정치시대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으며 또한 여성조직과 여성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과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담론과 성격을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참조하여 여성과 정치적 대표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여성과 새로운 정치, 여성과 생활정치, 여성조직과 연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1) 여성과 정치적 대표성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할 이유 중 하나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현과 평등성의 원리이다. 바크라크(Bachrach)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공의 이익은 대중 참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여성의 저대표성은 인구의 반을 공적 이익의 반영과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나 다수결 원칙, 인간 존중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Bachrach, 1967: 3). 여성의 이해가 대변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이념과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별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하여 필립스는 “참석의 정치(politics of presence)” (Phillips, 1995: 1-26)를 주장하면서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단순히 여성의 참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참여하는 여성들은 누구를, 무엇을 대표하는가가 중요하다. 대표성은 ‘누구를 대표하는가’의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과 ‘무엇을 대표하는가’의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 대표성은 대표가 지니고 있는 인종, 직업, 성별에 따라 소속집단의 핵심적 관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실질적 대표성은 대표가 ‘무엇을 대표하여 행동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대표의 행동이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스티븐스, 2010: 103-104).

(1) 기술적 대표성: 임계량(critical mass)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정책형성으로 이끌 역할을 수행할 여성위원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은 여성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 차원의 문제로 의제화되는 것을 가로막으며 의제화되더라도 덜 중요하고 덜 시급한 문제로 여겨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거나 주변화 된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으면 남성의 규범과 관심사가 운영의 기준이 되고 결국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 여성의 이익이나 욕구가 대변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칸터(Kanter)는 여성이 어떤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 구성원의 15%는 되어야 하며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의 이해는 무시되거나 저지된다고 보았다. 즉 의회에서 15% 정도의 여성위원이 존재할 때 여성의원들은 특정 사안을 지원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입법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Kanter, 1977: 966).

달럽(Dahlerup)의 연구는 공직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이 일정 수준이 되면 이 비율은 자기 지속력을 갖게 되어 여성의 비율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입법활동의 결과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즉 정치에서 여성의 비율이 대략 30%에 이르면 변화를 촉발할 ‘임계량’(critical mass)에 이른다고 본 것이다(Dahlerup, 1988). 여성위원의 증가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들 사이에 상호지원적 연대를 형성하여 여성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계량 개념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임계량에 도달하면 여성대표의 비율이 연쇄반응처럼 가속도가 붙는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스칸디나비아의 경우에서처럼 여성의 증가가 완만하고 점진적인 곳에서의 역학관계와 여성위원의 증가가 갑작스럽고 법으로써 강제된 곳에서의 역학관계는 다르기 때문이다. 20개 선진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5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통계 조사는 여성위원의 가속적 증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Studlar & MaAllister, 2002: 247-248). 따라서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대의기관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이 자동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실질적 대표성: 여성문제의 의제화

정치의 실질적 대표성은 대표가 개인이나 집단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행동할 때 나타난다. 여성의원들은 여성이해를 대변하는가? 이는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여성의 이해 증진이라는 면에서 과연 가시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여성의 현실과 지위의 개선, 세력화를 포함한 성평등 사회의 실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담론이다.

여성의원에게는 남성중심의 정치영역에서 주변화 되어온 여성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정치의 장에서 공론화하고 현실화할 것이 기대된다. 이는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에서 도외시되어 온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여성 관련 이해관계는 아동복지, 육아, 가사, 돌봄이나 출산활동과 관련된 권리,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사안, 사회내에서 여성의 지위변화와 관련된 사안 등이 있다.

라인골드(Reingold, 1992)는 1991년 미국 주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18%로 20년전 4%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에 착안하여 입법행위자로서 여성이라는 것이 여성을 위해 행동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연결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는데 여성의원들은 여성을 대표해야 한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교육, 보건, 사회복지와 같은 여성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비교적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카이자(Caizza, 2002)는 미국 50개 주 선출직 여성의원 수와 여성친화적 정책수립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선출직 여성의원의 확대가 여성친화적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같은 남녀의원의 성차와 여성의원의 실질적 대표성은 한국정치에서도 발견된다.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여성과 관련된 법률안 발의나 발언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여성의원들이 여성친화적 정책의 수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김원홍·이현출·김은경, 2007; 김원홍·윤덕경·최정원, 2008; 최정원·김원홍·윤덕경, 2008; 김원홍·양경숙·정형옥, 2009; 김은경, 2010; 서복경, 2010; 박영애·안정화·김도경, 2011). 한국 17대 국회 남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차비교에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현안’에 대해 남녀의원 간 뚜렷한 성차가 나타났다. 남성의원은 경제성장, 외교, 안보, 통상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여성의원은 양극화해소, 여성·노동문제, 교육문제 등을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 꼽았다(김원홍·이현출·김은경, 2007: 37-39).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국회의원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우선시하며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이 발의한 여성관련법률안이 많은 것을 밝혀낸 바 있다(김원홍·윤덕경·최정원, 2008).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여성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미, 2007; 허강숙, 2009).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여성의원들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성의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의회 내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가 여성 대표성 확대의 기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적 정책 확대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담론으로 연결되었다.

여성이 여성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에는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존재한다. 과연 여성의원과 여성정치인들은 여성을 대변하고 여성을 위해 행동하는가? 그렇다면 여성들은 동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여성의 이해와 성격은 남성과 다른가? 여성들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남성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여성의 이해’가 과연 존재하는지, 또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여성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담론은 여성이 여성의 이해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해를 대

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여성의원을 하나의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전제하거나 여성의원이 여성의 이해를 대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권수현, 2015: 358-359)는 것이다.

실제로 17대 국회에서 정치의 중심에 있던 쟁점 법안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차’ 보다는 ‘정당’이 원내정당의 강한 정당기율로 인해 국회의원의 입법행태를 구속한다고 한다(전진영, 2009; 2010). 여성정책 법안에 대한 17대·18대 국회의원 투표행태 분석결과를 보면 젠더의제나 여성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나 투표 행태에 있어서 젠더 뿐 아니라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성격이나 의회 내 정당구도, 정치적 맥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권수현, 2015: 337).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여성이 동일한 이해를 대표한다는 담론이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간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충원경로를 통해서 17대부터 19대까지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의 성격을 살펴본 김민정의 연구(김민정, 2014: 224-225)에 의하면 17대에는 여성단체활동을 했던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갔지만 18대를 지나 19대에 오면서 여성단체 출신의 여성의원들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여성 의원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충원배경을 살펴보면 여성의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남성정치인들이 정당의 기반도 없고 정치활동의 경험도 없는 전문직 여성들을 ‘끼워넣음’으로써 남성중심 정치 도구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민정, 2014: 225).

“제도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성향이 ‘친여성적’일 것이라는 본질주의적 가정을 전제로 정작 그들의 엘리트주의적 편향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중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제약성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침묵했다” (최일성, 2012: 210).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1) 여성정치활당제

여성정치활당제는 1995년 4차 북경세계여성회의를 기점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으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문경희, 2007: 282). 여성정치활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방안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 운동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다.

“할당제는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존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여성 권리 행사의 장애를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을 없앨 수 있도록 현재의 정치·사회·경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서,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라는 의미이며 현재의 여성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다. 할당제는 각 영역에서 활용되지만 특히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정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조현옥, 2011: 112)

그 결과 할당제여성연대에서 1995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의 10% 후보추천 등을 각 정당에 요구하였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30% 이상, 전국구 50% 여성할당을 촉구하였다. 이후 1998년 지방선거와 200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30%를 꾸준히 요구하여 결국 2000년 2월 16대 총선 직전에 이루어진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30% 여성할당 조항의 신설과 2002년 지방선거 전에 광역비례대표 후보의 50% 여성할당 조항의 신설을 위한 <정당법> 개정 요구와 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여성후보의 공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이후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강제 및 남녀교호순번제,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2010년 3월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대해 제한적으로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의무공천제를 규정했다(오유석·김은희, 2010: 259).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난 것은 여성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여성정치할당제라는 선거제도의 역할이 컸다. 여성위원의 수적 확대에 따라 성인지적 의정활동이 증가되었으며 여성관련 의제도 다양화되었다. 즉 여성이슈의 다양화와 여성친화적 의제의 확대를 통해 의회 내 여성의 권한 증대와 남성중심적인 의회의 정치문화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도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여성할당 방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정당들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역구 선출직 의원의 경우 30% 여성할당이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여성에 대한 할당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제도화되지 않아 강제성이 적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의석에서 비례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여성위원의 수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박채복, 2014: 264-266).

또한 사회적 역작용도 나타났다. 비례대표 50% 할당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지역구 공천 30%는 여전히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한 당내의 여성정치인의 노력과 이에 반대하는 남성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거세게 나타났다. 2012년 19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남성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남성정치인의 거부감을 보여준 것이었다. 즉 2012년 민주통합당은 지역구에서 여성을

15% 의무공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남성정치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성정치할당제에 대한 온갖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김민정, 2014: 230).

실질적 대표성의 차원에서도 여성정치할당제의 한계가 드러난다. 여성정치할당제가 여성들 중에서도 이미 기득권과 자원을 갖춘 소수의 여성들만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여성들 내부에서 일종의 유리천장” (조현옥·김은희, 2010: 129)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정치할당제로 정치권에 진입한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은 거의 대표하기 못하고 정치적 보수성을 강화하고 있는데(김민정, 2014: 210). 여성의 대표성 확대의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여성들의 차이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정치세력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윤이화, 2011: 27). <표1>은 여성정치할당제에 대한 반대담론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성정치할당제 담론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 좀 더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표 1> 여성정치할당제에 대한 반대 담론

‘기회평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p>할당제로 인해 자격이 없는 여성도 선출될 수 있다</p> <p>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정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자질을 갖춘 여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p> <p>‘할당제 여성’은 오직 여성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들의 정치적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한된다</p> <p>할당제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p>	<p>할당제는 여성들에게 일종의 유리천장과도 같다. 여성들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p> <p>할당제에 의해 선출된 여성은 ‘할당제 여성’으로 낙인찍히고 결과적으로 정치인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p> <p>할당제에 의해 선출된 여성은 ‘상징적 인물(tokens) 또는 ‘대리 여성(proxy women)인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성과 여성의 이익을 대표할 수 없다.</p> <p>할당제 규칙은 여성의 저대표성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p>

자료: Dahlerup(2006), 여기서는 문경희(2007: 288)에서 재인용함

(2) 남녀동수법

남녀동수법은 남녀 간의 단순한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남녀동수법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발전하였다. 1989년 유럽평의회는 1988년 결의문 채택 이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초로 이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를 민주주의와 연계하였다. 이 개념은 북경에서 열린 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프랑스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남녀동수법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김민정, 2015). 남녀동수법은 남성과 여성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선거에서 남성과 여성 후보의 동수 추천을 명시했다(김경희a, 2012: 136). 남녀동수법은 특히 의사결정 기관에서

남녀가 동등한 대표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여성은 인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인류를 구성하는 두 유형의 구성원 중 하나이다. 실용성은 있지만 임시적 처방의 성격이 강한 여성정치할당제와는 달리 남녀동수법은 절대적 원칙으로 이해되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가의 대의제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는 시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남녀동수운동은 “우리는 소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절반입니다” (스콧, 2009: 229)라고 하면서 여성은 소수자가 아니라 남성과 동일하게 사회의 절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본질주의적 입장인데 인류 구성원간의 본질적 차이는 성별 차이이며 이와 같은 차이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모든 구조와 사회 전체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전제로 한다(이명호, 2013: 102). 이러한 입장은 성차에 대한 고려가 허용된다면 연령이나 인종적 차이와 같은 다른 사회적 차이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는 다르다. 남녀동수법은 다른 모든 사회적 범주들도 결국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은 개인의 출생신고서와 신분 서류에 표시되는 유일한 개인적 특징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스티븐스, 2010: 171). 한국의 경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내의 ‘동수정치연구회’ 등이 여성정치할당제 담론을 남녀동수 담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의 글도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여성은 남성과 더불어 주권을 가진 시민의 절반, 인간 종의 절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남녀동수가 보장되는 정치여야 한다..... 남녀동수는 여성의 과소 대표성보다는 남성의 과잉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래서 남녀동수는 여성이 정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여성의 몫을 더 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침해된 절반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주, 2014)

2016년 19대 총선과 관련한 여성운동으로 2015년 1월 출범한 동수정치연대는 남녀 국회의원의 동수시대를 열기 위한 여성지도자 100인의 선언으로 발전되어 활동하고 있다.

(3) 정당공천제와 여성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기초의회 의원선거에까지 확대 도입되었으나 2014년 6.4지방선거 직전까지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김현조·이수구·박영강, 2010; 김정미, 2013: 4-7). 정당공천제 폐지 담론은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현상,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증대, 공천과정의 부정, 비리 유발, 지역주의 조장 심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에 반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담론은 정당공천제 폐지

가 부정부패나 지방의 중앙 예측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선거 자체가 자금과 조직이 동원되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방유지 및 토호세력들의 활동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자질있는 후보 공천을 통해 정당은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한다(이진옥·김민정·문경희 외, 2014: 16).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대표성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거대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정당공천에 따른 줄 세우기, 공천비리가 많으며 풀뿌리 지역운동출신 무소속 시민후보는 전멸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여성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즉 여성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 여성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문화적·이데올로기적 고정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후보공천 받기를 원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국의 정당에 대한 로벤더스키(Lovenduski, 2005)의 연구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팽배해 있고 제도적인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로벤더스키는 성평등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을 표방했던 정당에서도 공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후보자 명단에 이른바 “생색내기용 여성(token women)”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여성들은 공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의무공천제나 지역구 여성할당제 등의 여러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지역위원장의 영향력과 계보정치, 여성의무공천의 악용, 불공정 경선 및 절차적 불합리성, 형식적인 공천심사”(전진희, 2012: 46)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허수아비 여성후보’를 세워 공천 및 후보 등록을 하거나 아예 형식적인 공천 후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기도 한다(조갑련, 2010b: 9).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여성할당제와 결합하면서 여성후보들의 취약한 조건들을 만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여성의원들은 정당정치의 구현과 조직 등의 이점을 들어 정당공천제의 불가피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여성지방의원이 오늘날 20%대로 크게 증가한 것에는 정당공천제에 기초한 여성 할당과 비례대표 교호순번 제도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여성할당은 우리 사회 절반의 여성들이 정치에도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랜 시간 투쟁한 끝에 쟁취한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여성할당제를 대신해 여성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 없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할당제 이전의 남성 중심 정치 문화로 회귀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2011: 59)

3) 여성과 새로운 정치

여성과 새로운 정치 담론은 인간다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론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기존의 정치판에 단순히 끼어들자는 것만은 아니며 기존의 정치판과 정치문화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인데. 부패의 경험에 없는 여성의 참여로 기존 정치판의 낡은 문화를 깨고 새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실제로 부패와 젠더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정치, 행정, 경제적 참여가 부패 수준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정래·이현정·김장희, 2014: 94-96).

남성지배의 정치는 가부장적 정치구조와 권력 나눠먹기 식의 패거리 정치문화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정치적 부패와 비민주성, 비윤리성의 문제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의해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원들은 서로 봐주기 식의 남성들의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부패사슬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는 삶의 질, 평등한 권리와 개인의 자아실현과 참여, 그리고 인권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오유석, 2009: 44-45) 여성정치인의 육성과 발굴을 통한 정치권의 인적 쇄신은 그만큼 “부정부패 및 몸싸움과 욕설의 3류 정치”(정상호, 2014: 64)가 변성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정치 관행과 정치 스타일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다. 또한 공직에의 경쟁이 확대된다면 사회에도 이득이 된다. 여성대표들은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남성들 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들은 정치관행을 개선할 것이다. 정치가 보다 정직해 지고 부패가 줄어든 것이다. 정치가 보다 양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 스타일이 덜 공격적이며 덜 전투적이 될 것이다. 정책이 사회적으로 진보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정치적 문제를 언어로 표출하는 방식이 다양해 질 것이고 보다 다변화될 것이다.” (스티븐스, 2010: 109).

“여성들은 이 모든 걸 상쇄시킬 더 큰 무기를 가지고 남성들을 압도 할 수 있다. 정치의 생명인 깨끗함과 투명함, 섬세함과 자상함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읽고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한다. 부지런하다” (설문지조사(2014)²⁾)

그렇다면 여성의원의 정치활동은 어느 정도 활발하며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어떠한가? 여성의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치문화가 바뀌었는가? 여성의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여성과 새로운 정치 답론은 의회 내 여성의원 수가 증가하면 의회의 규범과 문화도 함께 바뀌게 되고, 입법안의 내용도 여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본다(최정원·김원홍·윤덕경, 2008: 87). 여성의원의 증가는 지방의회 전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2) 2014년 6.4지방선거 지역구에 당선된 광역시·도 여성의원에 대한 설문지조사의 주관적 문항에 대한 답변 자료이다. 설문지조사 전반에 대한 것은 이혜숙(2016: 147-190)을 참조할 것

성평등, 인권증진, 가족,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등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된 의정활동이 증가하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박의경, 2010).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는 남성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문화와 관련해서 여성의원 증가가 성평등이나 남성의원의 성인지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여성정책 의제가 증가되었고 남성의원의 여성의제에 대한 관심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원홍·양경숙·정형욱(2009)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관련 발언이나 출산관련 발언횟수가 여성의원보다 남성의원이 더 많았는데 이는 여성의원 증가가 지방의회 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여성의원 증가의 영향으로 남성의원의 성평등의식이 제고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치권에 들어간 여성들은 명목상의 “생색내기용 여성(token woman)”이며 남성중심적인 정치를 바꾸지 못할 거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여성의원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여성주의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연결된다. 그 이유로는 여성의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소속 정당이나 개인적 이데올로기, 신념 등으로 인해 여성의원들 사이에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의원이 여성정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일반적인 관심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오경희, 2010: 215).

또한 여성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보면 당선된 여성의원들은 남성중심적인 정치를 바꾸기 보다는 단지 남성중심적인 체제에 편입되는데 그쳤고 남성중심적인 정치를 오히려 정당화시켜준 측면도 있다. 남성중심적 정치 자체를 충분히 바꾸지는 못하였고 국회활동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변화된 채로 놓여있는 것이다(김민정, 2014: 232-233). 여성의원들은 정당 및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활동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원이 위원장이나 간사로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였고 대부분의 여성의원들은 일반 상임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의제의 설정이나 운영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에 여성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정당 내에서의 정치적 관행은 남성중심적인 폐쇄적인 문화로부터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김민정, 2014: 227)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성과 새로운 정치 담론에는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들과 다른 정치관을 가졌고 남성과 다르게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에 들어가면 정치를 다르게 한다는 입장이 깔려 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필연적으로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이 수행하는 일은 남성이 수행하는 일과 다른 것인가, 여성의 업무 수행 방식은 남성과 다른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는 않다. 사안을 여성문제로 규정한다고 해서 남성들이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들 여성문제가 어

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남녀가 합의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여성의원들만 항상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원도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도 아니기 때문이다.

4) 여성과 생활정치

지방화 시대와 함께 지방이 정치적 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방정치의 등장은 정치라는 것을 사람들의 생활에 더 가깝게 다가가서 그 지역사회의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갈등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절하고 해결하는 생활정치의 현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김영일, 2012: 28).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문제들을 파악하여 이를 공적 의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담론이 부각되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생활정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대두되었고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분출되었다. 여성운동 역시 지방자치 실시를 계기로 지방의회에 여성참여를 제도화하는 운동과 함께 선거 시기에는 여성후보자 발굴과 지원을 통한 개입을 시도했다. 지방정치에서도 여성문제나 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라는 맥락에서 지방의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기도 했다(김은희, 2014: 7).

특히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의회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이 복지나 환경, 문화 등 남성보다는 여성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어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지방정치는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나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인식하에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가 중앙정치에 대한 참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조갑련, 2010a: 71) 여성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가 장려되었다(엄태석, 2011: 232-233). 지방의 정치는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판으로서가 아니라 민생을 해결하고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구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어온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윤이화·하세현, 2014: 347-348).

“지역여성들은 지방의회의 활동, 지방행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조직화함으로써 참여와 감독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생활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며 안전하게 살 권리 지키기 차원에서 교육, 환경, 먹을거리, 지역예산, 주민참여 등 지역의제와 생활의제를 지방자치의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에 참여확대가 필요하다”(오미란, 2011: 26).

“지방자치는 중앙의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관점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을 산출한다. 따라서 구조적이고 큰 정치나 종합적인 정치적 이해력을 강조하는 중앙정치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심하고 작은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오랫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오유석: 2009: 45-46).

이처럼 지방자치는 생활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여성들에게 보다 적합한 정치영역이라는 여성과 생활정치 담론은 특히 지방선거 국면에서 많이 강조되었다. 자녀교육과 보육, 주거환경, 복지, 교통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지방정치의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일선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5) 여성조직과 연대

(1) 여성조직

기존의 정치구조에서 남성중심적 문화나 네트워크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은 남성문화와 남성중심적 네트워크를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실제로 네트워크의 범위와 강도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남녀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이아미, 2006: 23). 남성이 훨씬 많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남성의 네트워크에 여성이 끼어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여성과 남성의 네트워크 격차 외에도 여성은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의 참여경력이 길지 않아 사회적 자원 형성에도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남성들이 다수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주변화는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맺는 네트워크들을 어렵게 하고 의정활동의 제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성의원들이 일련의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여성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스티븐스가 “안전한 공간(safe space)”(스티븐스, 2010: 272)이라고 본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의 확보이다. 여성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성의원들이 남성과 다른 자신들의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여성조직 담론은 젠더화된 제도정치의 내부에 존재하는 “여성을 위한 제도적 ‘피난처’”(스티븐스, 2010: 272)로서 여성조직은 여성친화적 제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감과 신뢰감을 제공한다고 본다.

여성조직의 예로는 미국의회 내 여성 코커스(Women's Caucus)와 영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여성위원회(Women's Committees)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각 정당 내에 여성위원회 혹은 여성의원협의회 등이 해당된다. 2014년 지방선거 광역시도 여성 당선자 설문지 조사(이혜숙, 2016: 5장)에서도 이러한 여성조직에 대해서 48.4%의 여성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성 개개인이 가진 조건의 차이, 문제의식과 소속 정당의 당론의 차이 등으로 여성들이 동일한 이해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안태운·서해정·김은선, 2010: 93). 이러한 조직의 약점을 스티븐슨은 “여성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치시스템의 다른 부분이 실패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다는 점, 남성이 포함된 경우에도 남성들은 당혹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위협을 느끼게 되어 손을 떼는 경향이 있다는 점, 관련 여성들도 여성위원회의 내부 업무에 매몰되어 외부와의 소통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 이들 조직은 종종 정당 지도부의 선의에 의존하여 명맥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스티븐스, 2010: 275)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여성조직들만의 분리 활동은 여성의원들 간의 연결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정당 내 여타 부서의 남성의원들과도 유리된 경험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담론도 있다. 여성들만의 조직 활동이 조직 전체를 조망하는 주요 리더로서의 훈련에 있어 남성들에 비해 한계를 가지며 여성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여성들의 경험을 협소하게 하고 남성들과의 전략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장애가 된다”(이화영, 2007: 195)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여성조직 담론은 전체 조직과 고립되지 않는 범위라면 여성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관련하여 여성조직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2) 연대

여성의원들은 자신의 의회진출과 더불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하고 연대하면서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연대에는 여성의 원간 뿐 아니라 여성의원과 여성단체, 여성단체간 연대 등을 들 수 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정치활당제 또는 선거제도 개선 등에 진보와 보수를 넘어 범여성계가 하나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여성운동과 관련한 연대 담론(강이수, 2003; 김영희, 2000; 장미경, 2006)들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여성단체 조직 간의 연대에 대해서는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의 동질성을 가장 주요한 근거로 삼아 왔다고 본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활동해 온 여성단체들의 연대와 운동방식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그들 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활동이 여성단체간의 연대를 특성으로 하며 그 연대의 범주가 다양하고 넓을 수는 있지만 ‘여성’이라는 이슈를 넘어서서 정치적 이념의 단계에 들어서거나 여성후보의 자질 검증의 문제로 들어가면 연대가 어렵거나 깨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조현옥, 2005: 65). 어떠한 후보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수적인 증가만을 위해 여성이면 모두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엄격한 기준으로 여성후보를 선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실제로 여성들 사이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론적 연대 관점은 최근 들어 현실적 어려

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여성운동과 연대에 대해서 “차이의 정치학과 현장 여성주의” (이상화, 1998; 이상화, 2004), “횡단의 정치학” (허성우, 2007), “반성적 연대” (이현재, 2005; 이현재, 2007), “포용적 연대의 정치학” (허성우, 2006b), “우정의 윤리” (이혜정, 2010), “차이와 연대를 포괄하는 윤리의 정치” (임국희, 2011) 등등이 소개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이 미약했는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여성단체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어느 정도 증가한 상황에서 여성단체의 성격과 관련한 단체간의 독자적인 성향이 과거에 비해 강해진 상황에서 연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김원홍, 2014: 31).

방향과 과제 : 여성 정치세력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편적인 담론의 개발

지금까지 여성과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담론과 성격을 여성과 정치적 대표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여성과 새로운 정치, 여성과 생활정치, 여성조직과 연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담론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뿐 아니라 여성의원들이 정치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들의 의식과 정체성 변화, 여성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여성운동의 발전과 관련한 연대와 젠더 정치 등과 관련하여도 개발되어 총체적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정치를 하려는 여성후보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치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당위성에 대한 보편적 담론의 개발 뿐 아니라 교육, 확산이 중요하다,

1) 여성과 정치참여: 새판짜기와 다양성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은 여성의 저대표성 극복과 민주주의 실현, 지연되는 여성문제의 의제화와 정책적 해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 등으로 설명되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 등이 실시되어 왔지만 여전히 여성과 정치에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나 여성정치활동당제 등 제도적 개선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여성의원의 비율이 기존 정치문화 변화가 가능한 임계량이라 할 수 있는 30%를 아직 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는 여성정치활동당제의 도입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구의 경우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구도 임계량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담론을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피선거권을 가진 개인이 정치권에 후보로 나가고 당선되기까지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제약적 상황에 직면한다. 여성 정치참여의 어려움은 우선 정치적 훈련과 경험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문제와 네트워크 부족, 여성정치인에 대한 편견, 혈연·지연·학연을 중심으로 하는 연고주의, 권위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 정치문화도 여성들이 불리한 조건이 된다. 정치참여에서 여성의 임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성 정치참여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여성의 의정활동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대표성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특징은 무엇이며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한 이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 성과와 한계점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남성 주도의 제도 내에서 ‘여성문제’로 분류되는 사안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주변화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원들은 그들의 관심이 여성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깊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느낀다(Childs, 2004: 127).

“재선의원이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 질문을 많은 이들의 주 관심사에서 다소 밀려있는 복지, 여성, 청소년, 다문화 등을 주제로 삼는다면 너무 소극적인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것과, 굵직한 사업과제 간의 관심거리들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해 주는 것이 재선의원답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곳, 열악한 곳, 복지 사각지대 등을 여성인 제가 하지 않으면서 남성의원이거나 다른 의원이 대신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 또한 이치가 아닌 듯 하였습니다”(문춘단, 2014: 64).

여성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주변 문제로 분류되면 여성들조차 여성문제에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거나 의식적으로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원들은 꼭 여성의제만을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원인 여성의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여성구의원이 손만 들면 또 여성문제 얘기한다고, 여성의원인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는 여성문제로 환원이 되더라, 그런 상황에서 더 좁혀서 여성의제를, 여성의제만을 다루는 의원이 있어야 하는가.... 여성이라는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여성을 대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박해숙(부산)” (이진옥, 2015b: 39)

단순히 여성의 정치참여의 수적 확대 뿐 아니라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의 특징과 정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과 전략, 정치환경의 제도적 개선, 여성위원의 정치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성정치의 한계성을 극복하며 여성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증가되어야 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원들은 적극성을 띠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평등의식이 비교적 높고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크다. 그러나 여성의원의 관심이 단순히 여성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지역정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관심도 가지고 있다. 담론 구성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단순히 여성이해의 반영이나 여성권익의 신장뿐 아니라 평등과 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이 좀 더 부각되어야 한다.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여성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정치판의 ‘새판짜기’를 위해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정치 영역에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의정활동 등 정치에서의 성과가 다르고 정치문화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나 여성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수준이 낮은 의원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단순히 여성의원의 수만 늘리는 선거구제 개선은 오히려 유권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에 여성이 가진 섬세함과 구체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설문지 자료(2014))

이와 함께 여성의 정치권 진출이 약자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약자 전체를 위한 파이를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설득이 따라야 하며(김원홍·이수연·김민정, 2012: 195) “한국 여성의 대표성 확대의 딜레마”(윤이화, 2011: 153)를 극복하기 위한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개개인의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세력화는 공허하고 대표성의 과잉으로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여성정치는 권력의 위계화를 촉진할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들간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의 대표성 확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윤이화, 2012: 153).

“여성의 정치참가가 남성과 다른 정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다양성(diversity)이 요구됨. 현재 국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학력, 경력, 경제력 등에 있어서 전체 여성의 일부 여성만을 대표하고 있음.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여성들이 여성들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들 여성이 만들어내는 정치는 기존의 남성정치와 다르지 않음” (권수현 · 이진옥, 2016: 14).

2) 여성의 대표성과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여성정치할당제라는 제도적 도입과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남녀동수를 요구하는 담론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담론들은 “젠더 없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없는 젠더” (허성우, 2007: 187), “여성 없는 민주주의” (김은주, 2014), “남성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 (안숙영, 2016: 125)의 극복이라는 민주주의 담론의 맥락과 연결시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여성정치할당제인가, 남녀동수인가

여성정치할당제는 기술적 대표성의 차원에서 볼 때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정치할당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교한 담론 개발이 중요하다. 현재의 여성정치할당제를 둘러싼 논의는 성평등이라는 요구 아래 당위적으로 요구되거나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설명될 뿐 그 정치적 의미나 그것이 평등이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여성정치할당제를 여성들만을 위한 제도로 보아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반한다는 평가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문지영, 2012: 153).

여성정치할당제에 대한 사회적 역작용은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 토대위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보다는 “정치적인 필요와 여성운동의 이익이 만남 시점” (김민정, 2014: 231)에서 “빠른 경로 모델” (문경희, 2007: 291)을 택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역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당위성에 대한 보편적 담론의 개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저대표성이 여전하므로 여성문제의 의제화와 정책적 해결을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여성의 대표성 확대로 정치문화가 바뀌었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했고,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제시되어야 한다. “여성정치할당제를 통해 정치 영역에서 여성 대표를 늘리는 일은 민주주의를 진보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 (문지영, 2012: 182)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할당의 원리는 무엇보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로 위치 짓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혜의 차원으로 바라

보게 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안숙영, 2016: 136). 여성정치할당제 담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여성정치할당제는 정치영역에 단순히 여성의 수를 늘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여성정치할당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여성배제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 담론 및 실천을 교정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여성이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럼으로써 전체로서의 사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문지영, 2012: 178)라는 점이 좀 더 부각되어야 한다.

여성정치할당제의 한계로 인해 최근에는 남녀동수를 요구하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이명호, 2013; 김은주, 2014). 남녀동수는 모든 인간이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남성’이 아니라 ‘개인=여성과 남성’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남녀동수는 30%에서 50%로의 숫자 확대가 아닌 새로운 담론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다(엄수아, 2014). 한국에서 남녀동수운동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여성정치할당제조차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담론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미지수이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볼 시점으로 보인다. 다음의 글도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여성 30% 실현을 위한 점진적인 개선안보다 다양성을 반영하는 남녀동수로의 전환적 논의의 필요성 제기.... 다수의 국가에서 개헌을 통해 도입,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개헌 논의가 수명 위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동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요청됨”(권수현·이진옥: 2016: 14-15)

(2) 지방의회와 정당공천제: 폐지인가, 유지인가

2012년 대선에서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정치의 중요 쟁점이 되었다.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논쟁은 지방의회의 활성화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나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전개되었다.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비례대표와 여성할당제와 연계되어 여성 기초의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정치의 다양한 세력분포를 기존 정당구조로 단순하게 만들었으며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해 왔던 무소속 여성의원들의 당선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대두되었다. 지방의회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당락에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양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여성의 대부분이 당선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소수 정당의 진입로가 더욱 좁아져 결국 거대 정당의 공천 외에 대안적인 여성의 정치진입이나 당선가능성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희, 2010: 90).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은 지역을 중앙정치에 더욱 종속시킬 것이라 짐작할 수 있

다. 또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하고 재정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문적 역량을 가진 후보들이 공천 심사과정에서 탈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비례대표제와 결합하면서 여성참여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여성들은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지방정치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례대표제의 역할이 크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에서 여성의 정치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자를 당선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공천하거나 지명함으로써 더 많은 여성대표의 당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직력과 자금동원 능력에 열세이므로 주요 정당의 공천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활정치 중심인 기초의회가 중앙정치화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천방식과 관련하여 상향식 공천제는 당원 및 지구당의 대의원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정확하고 명확한 규칙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서 도입된 상향식 공천제가 여성과 같은 신인이나 지명도가 약한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는 연구가 있다(김민정, 2012; 김원홍·이수연·김민정 외, 2013). 즉 서구와 같이 정당민주주의가 안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정당에서 남성이 주도적이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하향식의 후원제적 방식이 여성들의 공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대 총선의 공천과정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김원홍·이수연·김민정, 2012)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전히 하향식 혹은 정당지도자의 여성확대에 대한 의지가 여성 대표성 확대에 주된 동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의 지역 경험도 기득권 배제 명분으로 채택한 상향식 공천이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를 부추기는 규칙이 되었다(오승용, 2014: 6).

그러므로 경선제와 더불어 중앙당 차원에서 여성의 진출을 보장하고 일정한 비율의 여성들을 공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전용주, 2005: 233). 상향식 방식이 설령 공정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여성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며 “‘전략공천’과 같이 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김민정, 2012: 67)가 있다. 그러나 하향식의 후원방식 공천은 공천받은 여성들을 정당지도부에 예측시키는 장치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당지도부는 “자기들이 활용하기 좋은 상징성을 가진 여성으로서 당내나 혹은 당 외부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루기 쉬운’ 여성을 공천할 가능성” (김민정·문경희·민경자, 2009: 27)이 높아 더욱 자율성이 떨어지는 입법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이 개별 후보자를 대신해서 집단적 수준에서 그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권자의 정보부족을 보완할 수 있으며 정치자원이 부족한 여성에게 이는 정치활동 진입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여성의 정치적 세

력화와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유지, 공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담론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3) 여성운동과 연대

정치참여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성평등 실현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영향력의 정치’ 또는 ‘참가의 정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요구해 왔다. 이제는 단순한 여성 정치참여의 수적 증가가 아니라 정치문화의 개선과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담론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확산하고 여론화할 여성운동조직과 연대가 중요하다.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의 확대나 선거제도의 개편과 같이 대표 체제 내에서 여성정치인의 참여를 높이는 문제와 더불어, 시민사회 영역에서 여성이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아래로부터 자신의 이익과 관심사를 형성·표출하고 그것을 대변할 적합한 대표자를 골라내며 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등의-해내는 문제 또한 고민해야 할 것이다.”(문지영, 2012: 168).

(1) 독자적인 여성정치세력화 조직의 필요성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여성정치운동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꼭 선거 국면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주된 관심을 두는 여성운동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여성조직들의 활동을 통해 담론을 구체화하고 여론화시켜야 한다. 지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조직화되어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지방정치에의 참여의 중요성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된 목표로 하는 여성정치조직이 필요하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여성들은 지방정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의회방청을 통한 지방의회 감시활동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분석, 조례의 제정과 개정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정치에 참여해 왔으며 쟁점이 되는 여성이슈에 개입하는 지역여성운동을 전개해 왔다(이혜숙, 2012: 105-139).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정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속적인 조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풀뿌리 지역운동과 결합된 일상적인 정치활동,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오미란, 2011: 26).

지역에 따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조직들이 있다. 2002년에 조직된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지역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여성운동 조직으로 지역 수준에서 만들어져 항시적으로 생활의제와 여성정책 개발, 유권자운동, 의정보니터링, 여성후보 발굴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가 조직되었는데 이처럼 여성의 정치권 진입 전후의 활동이나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위해 지역 수준에서도 지속적인 성격을 띠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치조직은 선거 후에도 여성의원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조직은 보다 긴밀한 협조와 연계로 여성의원의 든든한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치적 연대를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정책적 요구를 할 수 있고 보다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오명희, 2010: 67). 그런데 여성정치세력화의 운동의 경험들이 각 지역마다 상이하게 축적되면서 그에 대한 전망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정치조직을 통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도 “지역 맞춤형으로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취할 것”(이진옥, 2015b)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담론이 구체적인 성과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2)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연대

여성조직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여성들간의 연대가 중요하다(이혜숙, 2013). 지역마다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수준에서의 여성단체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회원의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아 여성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체운영이 몇몇 지도자와 소수 회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여성들과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이 많은데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 마을과 공동체 사회를 성찰하고 있었고 이러한 성찰은 지역 공동체의 긍정적 변화, 혹은 발전으로 연계”(주혜진: 2011)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여성조직화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잠재력이 크다. 이들의 잠재력을 지역 여성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 여성연대를 통해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중요하다. “지역내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조직화되어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성평등 의식과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임원정규, 2014)는 지적도 이런 의미이다.

20대 총선 부산여성총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 여성 주체에 대한 연구(이진옥, 2016)도 기존의 보수 여성에 대한 학문적인 무관심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수 여성이 지니는 연대와 제휴로서의 잠재성을 찾고자 했다.

“보수 여성이 지니는 유연함과 도덕적 가치에서 변화의 잠재성을 도출한다면 대화를 통한 횡단하는 정치가 가능하며 횡단의 정치 실천은 페미니즘의 성숙과 확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이진옥, 2016: 84).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목적과 목표, 그에 따른 전략과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박재규 김원홍·조선미 외, 2009; 김형준, 2010; 안태운·서해정·김은선, 2010) 앞으로의 운동방식과 연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사회의 개인화 경향에 주목하여 여러 가지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연대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방식과 여성후보 지원과 관련해서 기존 정치, 특히 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한 입장정리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정당과 여성의 정치참여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여성단체 자체의 후보를 낼 경우에는 여성단체의 역량으로 소수의 후보만을 관리할 수 있고 정당의 후보를 지원할 경우에는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듣고 여러 당의 여성후보를 지지하자니 단체 내 여성후보들의 성향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임우연, 2007: 18-26).

“지역 대의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유권자가 정당을 초월해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하승수, 2009)고 본다면 여성후보 지지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의제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독자적 정치세력화나 기존 정당과 제휴하는 연합세력화의 방식이 가능하다. 독자세력화는 정체성 유지라는 장점과 세력 확장의 한계라는 단점을, 연합세력화는 세력 확장이라는 장점과 정체성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여성들이 어떤 연대를 해야 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그동안의 여성운동은 여성들만의 운동으로 진행되어 왔고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원들과의 연대를 확장하는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여성의원들만이 아니라 남성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권수현, 2015: 359)는 지적처럼 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력과 여성주의 연대는 여성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와 여성정치

지방자치가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주변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여성의 세력화와 지방정치에의 참여는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주의 내에서조차도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지역이 만들어 내는 차이에 대한 구체적 경험조사의 결여와 이론적 고민이 적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여성들의 이해관계

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여성주의에서 지역여성들의 삶과 경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허성우, 1998, 2000, 2006; 박기남·김연순, 2008; 박기남·신경아, 2010; 이혜숙, 2014b; 안경주, 2015) 이것이 지역여성들의 요구와 만날 때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 속에서 지역여성들의 특수한 문제들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여성들의 삶의 변화는 지역여성들이 자기 문제에 대한 고민과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여성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오미영, 2007: 307) 이러한 바탕 하에서 지역에서의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생활정치와 젠더전략: 지방정치에서 젠더전략은 유효한가?

지방자치의 생활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여성들에게 보다 적합한 정치영역으로 간주되어 여성후보자의 선거과정에서 젠더전략³⁾을 많이 사용하였다.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연구(조희정 외, 2014: 145)를 보면 남성후보자들은 남성으로서의 특성을 거의 강조하지 않는데 여성후보자들은 성별 특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광역시·도 의회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이혜숙, 2016: 134) 68.4%의 여성의원들이 젠더전략을 사용했다. 정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당시의 새누리당의 83.3%, 새정치민주연합의 57.6% 여성후보자가 젠더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비수도권은 82.1%, 수도권은 55.2%가 젠더전략을 사용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많았다.

젠더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을 호명함으로써 여성성의 긍정적 이미지를 가져오게 하고 여성적 특성을 강조하거나 여성의제 실현의 책임자 등을 내세웠다. 여성 호명에서는 어머니(엄마)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그 외 (만)(큰)며느리, 아내, 딸, 아줌마, 학부모, 딸언니, 여장부, 여성 등이 있었다. 특히 ‘어머니(엄마)’를 강조하는 모성정치 젠더전략이 많았다. 그 외에는 여성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꼼꼼함(세심함), 따뜻함(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것이 많았으며 청렴성을 강조하는 것도 있었다(이혜숙, 2016: 135) 여성의원들은 여성의 꼼꼼하고 세심한 이미지가 여성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이혜숙, 2014a: 146-147) 2014년 선거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사용했다고 보여진다. 2014년 6.4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선거운동 경험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이진옥, 2014: 393; 이진옥·김민정·문경희, 2014: 57) 다수의 여성 후보자들이 젠더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생활의 일차적인 담당자를 여성으로 규정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3) 여성 정치인은 정치공간에서 남성 정치인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성적 수사학을 활용하며 또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적 수사학을 사용하기도 한다(안숙영, 2014: 203). 여기에서는 여성을 호명하거나 ‘꼼꼼함’이나 ‘따뜻함’ 등 여성성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홍보전략을 젠더전략으로 보았다.

할 수 있다. 여성들이 꼼꼼함과 세심함이 필요한 지방자치에는 잘 맞지만 중앙정치 무대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성을 강조하고 여성이 생활의 담당자라서 지방자치에 잘 맞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면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 홍보전략으로서의 젠더전략이 계속 필요하고 유리한 것 인지는 경험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며 여성의원의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모색이 필요 해 보인다.

(2) 지역여성주의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역여성과 관련한 그동안의 담론들은 지역적 특성을 이론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으며 현실의 변화를 주도하는 다양한 여성주체들의 개입과 참여에 대한 대안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 즉, 다양한 지역여성의 행위성, 주체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지역여성의 또 다른 대상화를 낳고 있으며 지역에서 여성주의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일반 여성의 정치참여과정과 경험을 간과해온 경향이 있다.

지역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다룰 때 지역여성의 주체성에 기반한 담론이 필요하다. 그동안 약간의 지역여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현황과악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문제의식이 개별적인 틀 안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다. ‘차이의 페미니즘’이나 ‘현장의 정치학’, ‘횡단의 정치학’ 등의 개념 등이 소개되기는 했으나(이상화, 1998, 2004; 허성우, 2007; 박기남·신경아, 2010) 지역여성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여성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통해 경험적 사실의 축적뿐 아니라 지역여성주의 이론의 지평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의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이 지역 수준의 생활정치에 적합하다는 시각에서 나아가 “중앙의 시선에 의해 외부로부터 규정되었던 지역에서 벗어나 지역내부, 지역적 차원에서 여성경험의 특성과 지역여성의 다양성과 다층성, 주체성에 관심을 두고 접근” (이혜숙, 2014b: 243)하는 지역여성주의의 맥락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맺음말

정치란 인간이 자신의 생활에 대한 기획과 결정을 하는 행위이며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의사결정과 정에서 배제되는데 정치는 성불평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을 정치로부터 차단하는 구조가 일상적인 생활문화와 사회제도 속에 체계화되어 있다. 정치는 공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왔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여성은 자연

히 비정치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다.

여성과 정치세력화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은 여성과 정치적 대표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여성과 새로운 정치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이러한 담론들과 더불어 지방자치시대, 생활정치시대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는 점, 여성조직과 여성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담론의 성격, 쟁점 등을 정리하고 여성 정치세력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편적인 담론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과 정치참여, 여성의 대표성과 선거제도, 여성운동과 연대, 지방자치와 여성정치를 중심으로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담론은 내용 뿐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여론화하며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권자 교육도 중요하고 SNS 같은 새로운 미디어 활용을 통해 “행동하는 여성 정치참여”(송경재, 2014: 88)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참가의 정치’ 뿐 아니라 ‘영향력의 정치’를 실현할 담론 확산을 위한 여성조직 활동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청년, 남성, 소수자 등 다양한 집단들과의 연대에 대한 담론들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여성들이 담론 생산의 주체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 강이수(2003), “90년대 여성운동과 연대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 김진균(편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한국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 문화과학사, pp. 103-128.
- 권수현(2015), “여성정책 법안에 대한 제17·18대 국회의원 투표행태 분석”, 『한국여성학』, 제31권 4호, 한국여성학회, pp. 331-366
- _____(2016), “한국 민주주의 과제-젠더관점에 기초한 성찰,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연대, 정치권력 주체의 교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pp.40-42
- 권수현·이진옥(2016), “Beyond 20. Toward 2020: 젠더, 청년, 민주주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서강대 여성주의학회 이음(공동 주최), 『20대 총선평가 집담회』, pp. 1-16
- 김경희a(2012), “1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 정치할당제의 지속가능성과 여성 정치세력화”,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여름호(통권 제94호), pp.118-147.
- 김경희b(2009), “‘좋은 정치’를 위해 여성들은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성정치세력화 영남권 포럼 자료집』, 울산여성회
- 김금옥(2014), “토론문”,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한국여성의정, 제4차 여성현안포럼, pp. 67-70.
- 김민정(2012),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의 대표성”, 『아시아여성연구』, 제51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p. 37-70

- _____(2014),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 연구』, 가을, 제14권 2호, pp. 203-241
- _____(2015), “프랑스 남녀동수법과 양성평등”, 『젠더리뷰』, 제36호, pp.70-82
- _____(2017),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인간사랑
- 김민정·문경희·민경자 외(2009), 『여성정치인의 경력 지속성 향상 방안』, 국회여성위원회
- 김상진·허신열·엄경영(2014), 『100% 당선 키워드』, 석탑출판사
- 김영일(2012), “생활정치의 장으로서의 지방의회”, 21세기 정치연구회 엮음, 『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 한울, pp.27-66
- 김영희(2000),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제108호, pp. 6-21.
- 김원홍(2010),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가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 10개 지역 기초의회 분석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16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23-30.
- _____(2014). “2014년 지방선거 여성참여 평가와 과제”, 국회의원 황인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87차 여성정책포럼, 『6.4지방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 과제』 자료집, pp.3-33.
- 김원홍·김은경(2010),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연구보고서(수시과제)-1.
- 김원홍·김인순·김은주(2014), 『2014 지방선거 결과 분석을 통한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양경숙·정형옥(2009),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윤덕경·최정원(2008),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 17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74권 1호, pp. 139-169
- 김원홍·배선희·전선영 외(2010),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방안연구』, 2010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이현출·김은경(2007),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 제6권 제1호, 통권 10호, pp. 27-54
- 김원홍·이현출·배선희 외(2012), “여성의원 경력지속성: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1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p. 71-102
- 김은경(2010),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대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16권 제2호(통권 제30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pp. 102-134
- 김은주(2014), “‘여성’ 비전 없는 안철수의 새 정치도 구태 정치일뿐”, 『여성신문』, 2014. 2. 7.
- 김은희(2010), “공직선거법상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의 효과분석: 2010년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pp. 73-99
- _____(2014), “지방선거 여성참여, 2014년의 경험 그리고 그 다음을 위한 모색”, 『경남의 여성정치세력화, 얼마만큼 왔나?』, 경남여성단체연합, 2014년 여성주간기념 6.4지방선거와여성정치세력화 토론회 자료집, pp. 7-27
- 김은희·김민정·오유석(2013), 『정치의 한 복판, 여성 젠더정치의 그늘』, 신명기획
- 김정미(2013), “2014년 지방선거와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KWDI Brief』, No. 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1-8
- 김현조·이수구·박영강(2014), “기초단체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과제: 기초의회의 여성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 제17권 제4호, pp. 51-74
- 김형준(2010), “2010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고찰”, 『젠더리뷰』, 16호, 한국여성

- 정책연구원, pp. 4-13.
- 남윤인순(2005), “17대 총선과 여성후보 추천운동: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조형옥 외, 『한국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 도서출판 사회와 연대
- 문경희(2007), “여성과 정치 그리고 할당제: 국제적 동향과 쟁점”, 『페미니즘연구』, 봄, 제7권 1호, pp. 273-300
- 문지영(2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여성정치할당제 문제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여름호, 통권 26호, pp. 149-186
- 문춘단(2014),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의정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pp.61-64
- 박기남 · 김연순(2008), “여성, 지역을 세상의 중심으로 바꾸다”, 『여성운동 새로 쓰기: 한국여성민우회 20년운동사 연구위원회(여음), 한울, pp. 331-376.
- 박기남 · 신경아(2010), “지역 여성 연구의 현황과 쟁점: ‘차이의 페미니즘’의 실천적 모색”, 『여성주의 지역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2010년 한국여성학회 제2차 학술포럼 자료집, pp.23-54.
- 박영애 · 안정화 · 김도경(2011),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입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1권 제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pp. 33-62
- 박의경(2010), “지방자치 20년 : 지역 여성정치의 현황과 과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1호, pp. 197-224
- 박재규 · 김원홍 · 조선미 외(2009), 『경기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 연구: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및 여성후보자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09-19
- 박재복(2014), “여성정치할당제: 숫자를 넘어서”, 『평화학연구』, 제15권 5호, 한국평화연구학회, pp. 245-270
- 서복경(2011), “17-18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비교: 투입측면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제18권,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p. 33-60
- 서현주 · 김경숙 · 송미영(2010), “한·일 여성 정치네트워크 비교 고찰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78권 제1호, pp. 201-227
- 송경재(2014), “정보화 시대의 여성 정치참여: 행동하는 여성의 등장?”, 『국가전략』, 제20권 4호, 세종연구소, pp. 67-98
- 신영옥(2011), “지역여성운동담론과 변화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여성의 전화’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논문(미간행)
- 스콧, 조앤 W. (2009), 『성적 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오미영 · 국미애 외, 인간사랑
- 스티븐스, 앤(2007), 『여성, 권력과 정치』, 김영신 옮김(2010), 명인문화사
- 안경주(2015), “지역 여성 활동가들의 행위력이 소환한 미생(未生)의 ‘여성학’과 지역현장여성주의의 동학: 광주지역 차세대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1권 4호, 한국여성학회, pp. 253-294
- 안숙영(2014), “젠더와 정치공간: 여성 정치인의 수사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0권 2호, pp. 203-231
- _____(2016),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페미니즘연구』, 제16권 1호, pp. 121-147
- 안태운 · 서해정 · 김은선(2010), 『경기도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역량 강화 연구』, 경기도의회.
- 엄수아(2014), “동수정치는 더 진보적인 가치”, 『여성신문』, 2014. 11. 20
- 엄태석(2010),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3권,

-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pp. 71-94
- _____(2011), “충북지역 여성 지방의원의 정치참여와 의정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정치정보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정치정보학회, pp. 227-259
- 오경희(2010),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의 문제점”,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12-216
- 오명희(2010),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사논문(미간행)
- 오미란(2011), “광주전남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과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호남권 토론회 자료집』, 광주여성재단, pp.9-28
- 오미영(2007), “여성이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함께하는 여성지역문화』, 신정, pp. 290-311.
- 오승용(2014), “6.4지방선거와 민주주의의 품질”, 『6·4지방선거와 한국정치: 평가/전망/대안』, 6·4지방선거 결과 및 평가 토론회 자료집, 진보정치연구소·한국선거학회·한국정치연구회, pp. 1-21
- 오유석(2008), “민주화이후 여성운동의 변화와 분화: 여성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한국 민주화 과정과 사회운동: 어떤 변화와 분화를 경험하고 있나?』, 제11회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pp. 3-18.
- _____(2009), “여성의 지역정치참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15호, pp. 43-51.
- 오유석·김은희(2010), “여성운동의 변화와 분화: 여성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국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 한울, pp.245-288
- 유병선(2014),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과제: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2014년 1차 지방자치여성포럼 자료집
- 윤이화(2011), “한국여성의 대표성 확대의 딜레마, 차이와 다양성의 정치: 제16대 국회에서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9집, 1호, 대한정치학회, pp. 153-186
- 윤이화·하세현(2014),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확산효과에 관한 연구: 프랑스 지방의회 동수법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70권, 한국동북아학회, pp. 345-368
- 이명호(2013), “성차와 민주주의-차이와 평등을 다시 상상하기”,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37집, pp. 87-113
- 이상화(1998), “페미니즘과 차이의 정치학”, 『철학과 현실』, 가을호, 철학과 현실사, pp. 181-196.
- _____(2004), “지구화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차이의 존재론과 공간성의 사유”, 『한국여성철학』, 제4권, pp. 79-141.
- 이아미(2006),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협동과정 석사논문(미간행)
- 이재희·김도경(2012), “비례대표 여성의원과 대표성: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2권 제3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pp. 7-41
- 이진옥(2014), “6.4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선거운동 경험 분석”, 한국여성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2014. 11. 22), pp. 385-404
- _____(2015a), “2015년 여성 정치 참여의 세계적 동향 및 여성 정치대표성 관련 글로벌 의제의 현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북경여성대회 이후 20년, 젠더와 개발 엿보기: 59차 유엔세계여성지위위원회 회의의 참관기』 자료집, pp. 44-54
- _____(2015b), “<2016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플랫폼 만들기> 사업을 마무리하며”,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6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platform』, pp. 13-54.
- _____(2016), “보수 여성 주체에 대한 연구: 20대 총선 부산여성총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pp. 41-92

- 이진옥·김민정·문경희 외(2014),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6.4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선거운동 경험에 대한 연구』, 2014년도 여성대표성 강화 지방선거 모니터링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이진옥·김은주(2015), “선거 제도 개혁과 여성 대표성 쟁점의 현황”,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제20대 총선 여성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비례대표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pp. 9-18
- 이혜숙(2012), 『지방자치와 지역여성의 전망: 지역여성정책과 지역여성운동의 동학』, 집문당.
- _____(2013), “지구화·지방화 시대 지역여성운동과 여성연대의 전망: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8집, pp. 39-81
- _____(2014a),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과 성평등 의식: 경남지역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0권 1호, pp. 113-172
- _____(2014b), “한국여성학과 지역 여성주의의 모색: 경남지역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14권 2호, (사)한국여성연구소, pp. 243-280
- _____(2016),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다산출판사
- 이혜정(2010),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주체, 공동체, 연대 그리고 우정의 윤리”, 『한국여성철학』, 제14권, pp.65-89.
- 이화영(2007), 『한국 정당조직 내 여성의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미간행)
- 임국희(2011), “여성주의 정치 패러다임 전환의 이론적 모색: 차이와 연대를 포괄하는 윤리의 정치로”, 『페미니즘연구』, 제11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pp.119-152.
- 임우연(2007), 『지역여성의 과소대표성과 집합정체성 연구: D지역 여성단체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미간행)
- 임원정규(2014), “지역여성정치의 가능성과 한계”,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2014년 1차 지방자치여성포럼 자료집
- 장미경(2006), 『한국 여성운동과 젠더정치』, 전남대학교출판부.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2011), “지방자치 결의대회 관련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의견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호남권 토론회 자료집』, 광주여성재단, pp.58-59
- 전용주(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한국정치학회, pp. 217-236
- 전진영(2009), “여성의원은 양성평등법안을 더 지지하는가?”, 『의정연구』, 제15권 제2호, 통권 제28호, pp. 187-217
- _____(2010), “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 분석: 성차는 존재하는가?”, 『한국정치연구』, 제19권 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pp. 101-121
- 전진희(2012), “광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여성정치세력화, 어디까지 왔나?』, 2012년 전남대 여성연구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pp.23-50
- 정상호(2014), “6·4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 『6·4지방선거와 한국정치-평가/전망/대안』, 6·4지방선거 결과 및 평가 토론회 자료집, 진보정치연구소·한국선거학회·한국정치연구회, pp. 56-65
- 조갑련(2010a), “지방선거와 젠더정치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4권, 제1호, 국지방정치학회, pp. 69-83.
- _____(2010b),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참여: 2010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

4. No 2. pp. 1-14
- 조선미(2007), “여성의원 증가와 생활정치 활성화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도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미간행)
- 조정래 · 이현정 · 김장희(2014), “부패와 젠더: 기초자치단체 부패 영향요인의 탐색”, 『정부학연구』, 제 20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pp. 89-121
- 조현옥(2005), “한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 조현옥(외), 『한국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도서출판 사회와 연대, pp. 43-69.
- _____(2011), “여성과 정치참여”, 김민정 · 강경희 · 강윤희 외, 『젠더정치학』, 한울, pp.94-117
- 조현옥 · 김은희(2010), “한국여성정치활동제도 제도화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79호, pp. 110-139
- 조희정 외(2014),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제공 정보와 홍보전략에 대한 고찰: 선고공보의 다지안 · 이미 지 · 공약 · 현안 · 채널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 pp. 123-156
- 주혜진(2011), 『대전여성의 사회참여: 지역공동체운동 사례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11-12. 대전발전연구원
- 최일성(2012),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배제: 1987년 6월 민주항쟁기에 대두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기억과 전망』, 겨울호(통권 27호), pp. 192-213
- 최정원 · 김원홍 · 윤덕경(2008), “17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성차 분석: 여성관련 법률안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Vol. 25, pp. 83-110
- 푸코, 미셸(1976), 『성의 역사: 제1권 얇의 의지』, 이규현(역)(1997), 나남출판
- 하승수(2009), “시민운동과 2010년 지방선거”, 『여성정치세력화 영남권 포럼 자료집』, 울산여성회
- 허강숙(2009), “여성의원비율증가가 생활정치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라남도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미간행)
- 허성우(1998), “지역 여성현실과 한국여성운동의 새국면”, 『사회과학연구』, 제16집 제2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2000), “지역여성운동의 현실과 지역사회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14호, pp. 270-287.
- _____(2006), “지구화와 지역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 _____(2007),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 · 개혁주의적 젠더정치학의 성과와 한계”, 학술단체협의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6월항쟁 그 이후』, 한울, pp.187-227
- Bachrach, Peter(1967), *The Theory of Democratic Elitism: A Critique*. Boston: Little Brown Co.
- Bystydzienski, J. M. (1992), *Women Transforming Politics: Worldwide Strategies for Empowerment*, Indiana L Indiana Univ. Press.
- Caiazza, Amy(2002), “Does Women’s Representation in Elected Office Lead to Women-Friendly Policy”,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Research-in Brief). pp. 1-5
- Childs, Sarah(2004) *New Labour’s Women MPs: Women Representing Women* London: Routledge.
- Dahlerup, D.(1988), “From a small to a Large Minority: Woman in Scandinavian Politic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 11. No 4, pp. 275-298
- Hartsock, Nancy (1998) “The Feminist Standpoint Revisited”, Nancy Hartsock(ed), *Feminist Standpoint Revisited and Other Essays*, Boulder, CO: Westview Press.
- Kanter, R. Moss(1977), “Some Effects of Proportions on Group Life: Skewed Sex Ratio and Responses

- to Token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pp. 965-990
- Lovenduski, Joni(2005), *Feminizing Politics*, Cambridge: Polity
- Phillips, Anne(1995), *The Politics of Presence*, Clarendon Press. Oxford.
- Reingold, Beth(1992), “Concepts of Representation among Female and Male State Legislators’ ” ,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 17, pp.509-537
- Studlar, D. T. and I. McAllister(2002), “Does a Critical Mass Exist? A Comparative Analysis of Women’s
Legislative Representation since 1950“,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1, No. 2, pp.
233-254
- Vianello, Mino(2000) “Exercising Power“, Mino Vianello and Gwen Moore(eds) *Gendering Elites: Economic
and Political Leadership in 27 Industrialised Societi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p. 141-154

여성 정치세력화의 현황과 과제 :
총선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 정치세력화의 현황과 과제

- 20대 총선과 2014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I. 여성의 정치참여는 실질적 성평등의 필수조건

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등한 국가인가.

□ 2016년 국가 성평등지수(여성가족부 발표)

- 국가성평등지수는 완전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봤을 때 2014년 69.9점
-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직 부문

□ 2016년 성격차지수(세계경제포럼)

- 144개국가 중 116위(0.649점)
- 분야별 경제참여 및 기회 123위, 건강과 생존 76위, 교육적 성취 분야 102위, 정치적 권한 92위(*)-2012년 86위, 2013년 86위, 2014년 93위, 2015년 101위, 2016년 92위

□ 성평등이 이뤄졌는가?

- 여성혐오 현상 계속 증가, 오히려 남성 역차별 주장
- 강력범죄로 인한 폭력피해자 여전히 대다수 여성, 최근 전반적인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크게 증가함. (흉악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조금 더 많지만 성폭력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의 9.2배 많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정체, 맞벌이는 필수인 시대 속 여성일자리는 불안정, 비정규, 저임금
- 생애주기 여성노동 : 비정규직, 서비스, 감정, 돌봄노동 → 경력단절 또는 1인가구 → 손주 돌봄, 노후대비 자금 부족, 남성에 비해 연금격차, 재산권 취약 등 → 여성의 빈곤화 악순환

- 최소한 성평등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람은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에 위치한 ‘정치인’
- 오랜 가부장적인 역사 속에서 여성의 공적영역의 정치참여는 후발주자인 상황.
-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번 선거 때마다 뜨거운 감자 취급.

□ 여성의 정치참여는

-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임.
-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여성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됨.
- 국민의 한 일원이자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는 진정한 정치발전과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길임.

□ 여성의 정치참여 팩트 체크

1) 20대 국회의원 개괄(2016. 4월 기준)

- 정당별 의석수
: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 연령대별 : 20대 1명, 30대 2명, 40대 50명, 60대 161명, 60대 81명, 70대 5명
- 성별 구분 : 여성의원 51명, 남성의원 249명
- 정당별 성별 구분

개표완료 제20대 국회의원 통계

정당별(명/%)



정당별 의석수



연령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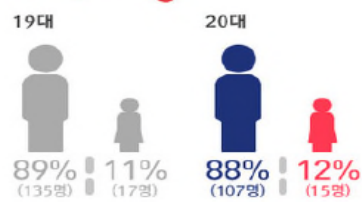


성별 남성의원 249명 | 여성의원 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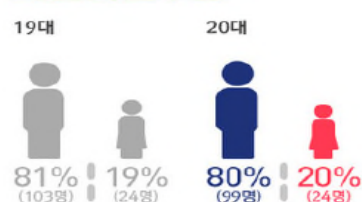
	여	남	계
	51명(17%)	249명(83%)	300명
더불어민주당	24명(20%)	99명(80%)	123명
새누리당	15명(12%)	107명(88%)	122명
국민의당	9명(24%)	29명(76%)	38명
정의당	3명(50%)	3명(50%)	6명
무소속	0(0%)	11명(100%)	11명

국회의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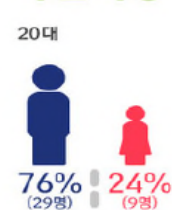
새누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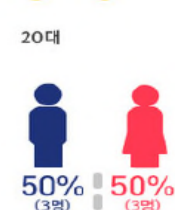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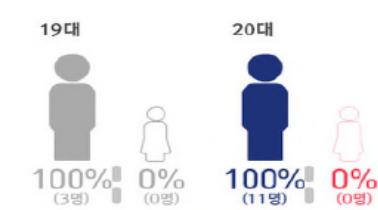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2) 20대 총선 여성정치인 현황

(1) 역대 총선 여성정치인 현황

1992년 14대 8명(2.7%)
1996년 15대 10명(3.0%)
2000년 16대 16명(5.9%)
2004년 17대 39명(13.0%)(*)
2008년 18대 41명(13.7%)
2012년 19대 47명(15.7%)
2016년 20대 51명(17.3%)

출처-여성신문. 2017.4.27



(2) 지역구 여성 출마 현황

① 역대 여성후보 출마와 당선

: 15대 국회 2명 당선
: 16대 국회 33명 출마, 5명 당선
: 17대 국회 65명 출마, 10명 당선
: 18대 국회 132명 출마, 14명 당선
: 19대 국회 63명 출마, 19명 당선
: 20대 국회 98명 출마, 26명 당선(*)

(*) 새누리당 16명, 더불어민주당 25명, 국민의 당 9명, 정의당 6명
(남성출마자 8분의 1 수준, 26.5%)

②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여성

: 총 934명 중 98명인 10.5%, 19대에 비해 0.7% 증가함.

③ 20대 총선, 여성후보자들의 정당별 비율

: 정의당 51명 중 6명 공천(11.8%)
: 더불어민주당 234명 중 25명(10.7%)
: 새누리당 248명 중 16명(6.9%)
: 국민의당 171명 중 9명(5.3%)의 순

: 각 정당의 여성공천비율 : 정의당이 가장 높았음.

: 수적인 측면 : 더불어민주당 25명>새누리당 16명>국민의당 9명>정의당 6명 순.⁴⁾

20대 총선 정당별 지역구 선거 여성후보자비율

(단위:명/%)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타 정당 (16개)	무소속	합계
여성	16 (6.9)	25 (10.7)	9 (5.3)	6 (11.8)	33 (34.0)	9 (6.8)	98 (10.5)
남성	232 (93.1)	209 (89.3)	162 (94.7)	45 (88.2)	97 (66.0)	124 (93.2)	836 (89.5)
합계	248 (100.0)	234 (100.0)	171 (100.0)	51 (100.0)	130 (100.0)	133 (100.0)	934 (100.0)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① 20대 국회 여성비례대표 당선자 : 25명

- 새누리당 9명, 더민주당 7명, 국민의당 7명, 정의당 2명)
- but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여성 홀수임에도 더불어민주당 15번에 남성 배치

20대 총선 비례대표: 성별

비례대표	계	남	여	여성비율
19대 총선	188	109	79	42.5
전체	158	83	75	47.5
새누리당	44	18	26	59.1
더불어민주당	34	15	19	55.9
국민의당	18	9	9	50.0
정의당	14	7	7	50.0
노동당	2	1	1	50.0
녹색당	5	2	3	60.0
기타	41	31	10	24.4

각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자료 재구성

각주2) 20대 총선에서는 23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명단 제출

<출처-여성신문. 2017.4.27>

4) 제20대총선평가토론회|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발제자료(김은주 2016: 28). 2016.5 한국여성단체연합

- 2004년 정당법 31조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구 30%, 전국구 비례대표 50% 여성후보 공천을 명시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 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0.2.16, 2005.8.4]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 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2010.3.12]

3) 지방선거 여성당선자

- 2010년 지방선거 : 전체 2,888명 중 626명 당선(21.6%)
- 2014년 지방선거 : 광역 단체장(광역시장과 도지사) 여성0%
 - 기초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여성 226명 중 9명 당선(3.98%)
 - 광역의원 선거 남성 당선자 86%
 - 기초의원 선거 2,898명 중 732명(25.3%) (2014.6.15.한겨레신문)

4) 소결

- 총선에서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임.

-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적 강제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이 17.1%,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
- 17대, 18대, 19대, 20대 총선에서의 여성 비례직 당선자의 수는 30명을 넘지 못하고 정체 현상.
-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26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10%에 불과하여 지역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

□ 여성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현실과 과제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나 성평등 실현은 시간이 경과된다고 저절로 이뤄지지 않음.
-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의 삶의 질은 직결
 -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성숙된 제도개선으로 실질적인 양적 질적 토대 이룰 수 있음.
- 민주사회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함.
- 국정과 생활정치 영역의 연계성을 통한 여성의 가치, 여성의 감성, 여성의 경험이 반영돼야 함.
- 여성의 삶에서 주로 다뤄오고 있는 육아뿐 아니라 교육,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여성들이 맡아온 영역을 포함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위한 맞벌이, 맞살림, 맞돌봄 등 돌봄공동체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인지적인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의 관점,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생활정치영역의 활동 전개는 모든 시민에게 그 혜택은 전달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음.
- 지방정치무대 여성의 과소대표성 해결을 위해 지역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고,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교육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법적 장치의 이행 강화 필요

-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 강화
-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

II. 20대 총선과 젠더 이슈

- 30년만의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낸 20대 총선은 아무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함
- 2030 청년층의 투표율이 증가했고, 젊은 여성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주목해야 함 - 최근 청년여성들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주체로 부상 중. 여성정책을 부각시키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이슈를 제기
- 20대 여성후보자의 등장과 20대 여성투표율 증가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20대 여성들이 의미있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음을 의미
- 정치인의 차별적 발언,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재현한 투표참여 캠페인, 정의당 중식이 밴드 논란까지 집요하게 문제제기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조직화 됨
- 여성단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캠페인 지속 - 여성혐오, 성차별적 정치인 드러내기
- 20대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중요 현상을 돌아보고, 젠더적 교훈을 찾아내야 이후 여성정치 세력화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

1. 20대 총선, 새로운 정치주체의 등장⁵⁾

- 300명의 당선자 중 20대는 1명, 30대는 2명에 불과하고 20대 총선 당선자의 평균연령은 55.5세로 19대 총선보다 고령화되면서 50대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표되고 2~30대의 대표성에는 심각성 드러남
- 20대 총선 비례대표의원, 여성후보자들은 소수정당에서 배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등 주요정당의 지역구 여성후보자들은 현직의원이 많음.
- 19대 총선시기 청년비례대표의 ‘청년’ 기준은 만 35세 이하였음.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는 ‘만 39세’ 이하로 결정되어 청년의 범위가 매우 넓어짐. 소수정당에서 20대 여성후보자들의 등장은 ‘20대, 여성, 소수정당’이라는 위치성으로 인해 새로운 매우 의미있는 질문을 우리사회에 던지고 있음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제한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하,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만 40세 이하로 제한됨. 20대 총선에서 민중연합당 손솔(만21세) 대표는 ‘당 대표임에도 피선거권 때문에 후보조차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 피선거권 기준이 합당한가에 의문제기
- 청년 중에도 좀 더 나이 많은 사람이 낫다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함. 일명 ‘나이주의’ 라는

5) 제20대 총선의 교훈과 여성운동의 과제, 2016. 한국여성단체연합 제20대 총선 평가토론회. “젠더정치의 오늘과 내일”,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토론 요약

‘좀 더 나이 지긋한, 사회적으로 더 능력이 있거나 권위가 있어 보이는 비장애인 남성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통념 속에서 남성들의 것으로 전유되어온 정치 전체에 대한 질문과 연결

2) 선거운동에 있어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

- 2014년 지방선거 시기 한 후보자의 자녀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후보 자녀들이 보인 지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자녀’ 까지 선거 결과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 되는 경향
- 결혼하지 않은 후보자는 자신의 부모가 유일한 지지자이자 선거 운동원임. 그러나 결혼한 후보자는 헌신적인 배우자와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자녀, 아직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부모까지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운동원이 많음
- 20대 총선에서 많은 후보자의 자녀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위해 선거운동 과정에 등장. 20대 여성후보의 등장은 이런 차별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음. 여성 후보자들도 ‘~~댁’ 으로 성별화된 선거운동방식을 선거의 유리한 지형으로 활용해 왔고 차별적인 가족 중심의 선거운동 방식에 익숙해 있음.

3) 돈없이 정치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돈 없는 사람은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후보로 등록할 수가 없음.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고, 선거운동비용도 선거결과 10% 이상을 득표해야 50%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음. 선거운동 비용은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선거공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20대 여성후보자들은 출마를 결심하기 매우 어려움. 결국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출발선에 설 가능성’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시작부터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함

4)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는 정당한가? 제한적인가?

- 선거방송토론회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임. 그러나 공직선거법 82조 2항 4호는 5인 이상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 또는 최근 4년 이내의 선거에서 10%이상 득표한 후보자 및 여론조사 평균이 5% 이상인 후보자에게만 방송토론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제한적으로 초청대상 후보들이 동의하면 참석할 수 있음.

2. 20대 총선과 젠더이슈

1) 선거 정책의제 측면 : 여성/젠더 정책의 실종

- 짧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 직전까지 진행되는 정당공천등으로 젠더 관련 정책의제가 특별히 부각되지는 못함
- 전반적인 정치 보수화 경향속에서 성평등 정책공약 사라짐. 여성이 여성을 대표하는가? 어떤 여성인가에 대해 충분히 논쟁되고 있지 못한 현실
-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 실행, 여성비하나 여성차별 발언을 한 정치인의 낙천·낙선 정도를 의제화 함
- 교호순번제도 일부 깨지고, 여성후보 공천원칙에 대한 합의방식 깨지면서 “인맥”과 “인맥”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의리”만 남음
-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남은 것은 “더 대규모로 벌어진 가족사업”
-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추상수준의 높은 입법의제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정책 의제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나, 사회경제정책 의제는 선거기간에 갑자기 정치화하기 어렵고 일상의 활동이 축적되어 있어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2) 젠더문제의 정치담론

- “애 많이 낳는 순으로 비례대표 배정” 해야
- “여자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 밉상을 산다. 약간 모자란 듯 보여야 한다.”
-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 여성유권자들에게 화장품 고르듯 투표하라!, 투표를 하면 아이돌 스타 설현이 ‘심쿵심쿵’
- 중식이 밴드 사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여성위원회의 연대성명
-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현실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 확대 필요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약자들에 대한 차별, 배제, 비하 등 폭력이 증대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행태를 개선해 나가야 함

3) 4.13 총선에서 ‘각자도생’ 해서 살아 돌아온 여성들

- 17대 총선 39명(13%), 18대 총선 41명(13.7%), 19대 총선 47명(15.7%), 20대 총선 51명(17%)으로 매 선거마다 여성당선인 최고치 기록
- 당선인 구성도 비례대표(25명)보다 지역구(26명)가 많아서 ‘여성의원=비례대표’라는 통념도 깨지고 있음
- 제도개선이나 각 정당의 의도적 노력이라기보다는 여성후보자의 각자의 경쟁력과 고군분투의 결과이고 유권자의 선택이 큰 몫

3. 여성운동의 과제 / 여성참여확대 제도개선방안, 뚫어낼 지점은?

- 여성 비례대표제의 확대, 선거구별 여성 1인 의무공천으로 여성 의원 비율이 20%를 이제 넘어선 시점.
- 여성들의 정치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벽은 정당. 유권자는 성별 가리지 않고 선택 투표함. 후보가 비판·견제 능력을 가졌는지, 정책은 어떠한지 따져봄. 반면 정당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직을 중요시함.
- 하지만 여성들은 조직을 기반으로 지역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정당의 눈에 들지 못함.
- 예전과 달리 여성단체를 통해 정계에 입문하려는 여성들보다 정당공천제를 통해 정치에 입문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짐.
- 정당에서 여성 진출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관건임.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를 넘어선 성숙되고 발전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임.
- 여성은 ‘볼 수 있는 존재’ 라기보다 ‘보여 지는 존재’ 로 나타남.
- 성평등을 위한 필요조건은 가부장제적 문화의 변화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임을 정치와 정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라면 함께 인식해야 함.
- 여성에게 더 나은 세계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구축하기’ 위한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총선과 지방선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
- 사회 각 영역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독 정치 분야의 참여는 매우 더딤. 그나마 매 선거시기마다 여성계에서 비례대표 확대, 여성할당 의무화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여성의원 수가 증가해온 것.
- 여성들이 여성정치할당제의 제도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수적인 대표성의 확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참여, 가치 및 덕성을 담지하는 ‘시민성’ (citizenship 혹은 civility)을 확보함으로써 여성들이 실질적인 힘의 증진(empowering)을 이루도록 하는 것임.
- 여성의 정치 참여를 단기간에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유권자들의 의식 혁명도 일어나야 함.
- 지방정치의 운명은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 있음. 선거과정에서 여성들이 공천의 벽을 넘고 지역구 후보로서 당당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당헌·당규를 통해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공천 확대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해야 함
- 여성정치인의 자치단체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선거제도의 보완에 의해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여성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자치단체장 진출은 아직

걸음마 수준임. 이러한 노력은 선거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정당민주화의 노력을 통해 가능함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민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선거에서 여성은 자금이나 조직력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음. 정치는 잘하겠는데 선거는 못해먹겠다는 여성정치인의 하소연을 자주 듣게 됨. 결국 여성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 정치제도의 변화는 정당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임.
- 정치체제의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이 정당 내 일부 민주성을 제한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당 지도자들이 합리적으로 정당을 운영할 경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리임. 한국의 정당정치는 오랜 기간 동안 보스정치의 영향을 받아 왔고, 지금도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정당 내에서 위계성이 부정되어서는 안됨. 하지만 위계성이 갖는 의미는 합법성이고 정당성이자 독재가 아님. 결국 한국의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위해, 그리고 지방정치호의 순향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은 정당의 민주성 확보임
- 2000년 처음으로 정당법 상 여성정치할당제가 도입되고, 2004년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매 선거시기마다 여성참여확대를 위해 제출되는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다르지 않음.
-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 강행규정화,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할당 의무화’가 기본골격이지만 엇불처럼 외위도 관철되지 않고 있음
- 여성정치할당제나 동수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30% 임계치에 도달할 때 까지는 여성비율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한국은 여성의원비율 10% 중반에서 때 이른 백래쉬 현상 나타남
- 비례대표로 선출된 후보들은 정당 내 기여도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집단을 대표할 만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기 어려움.
- 비례 여성후보가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적 입장이 수렴되고 토론되며 세력화 되어야 함
-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여성당선자가 많아지는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었지만, 아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여성후보가 공천되거나 당선되기 어려움
- 여성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여성국회의원 연대기구 구성
- 성평등 정책기구의 정상화
- 교육, 복지, 안전, 재정에 대한 공적 논의시작

4. 동수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제언

- 성평등은 여성적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치로서 남녀노소 모두가 추구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새로운 운동, 남녀동수운동이 필요함.
- 남녀동수가 요구하는 50%는 시혜적 차원의 할당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항상 여성이거나 남성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임.
- 동수를 통한 평등은 선진국가들의 공통분모임. 대표성에서의 남녀동수는 여성문제가 아니라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구성에 관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성평등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임.
- 불평등은 많음과 적음의 구분이 지어질 때 발생하는 것임. 여성인구가 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저대표성은 기회균등, 인간존중 등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여성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성 친화적 정책수립이 삶의 질에 중요하기 때문임. 정치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면서 건강,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 분야에서 여성들의 시각과 판단력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옴
- 새로운 정치는 지역단위에서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사안들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이러한 과정에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불가분의 관계
- 각 정당에서는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됨.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해야 한다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매 선거시기가 되면 각 정당들은 당내에 제대로 훈련된 여성 정치인이 부족하다며 당내 여성보다 외부 영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그러나 외부 영입으로 비례대표직을 맡게 된 여성은 당선이후에도 당내 지지기반이 없어 권력관계 대항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일회용이거나 여성정치인으로 경력을 지속시켜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내의 여성정치세력화를 일궈내지 못하고 정치도 젠더 친화적으로 형성해내지 못함. 직업정치인으로 여성을 키워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내 여성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
- 북유럽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지역밀착형 정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당에서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지역 활동에 근거해서 후보를 길러냄
- 여성들은 교육과 지역 활동을 통해서 정치를 생활 속 수다로 이웃들과 친숙하게 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음
- 급격한 사회변화로 돌봄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지금, 사회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그래서 여성의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젠더의식 있는 여성의 정치진출을 높여내야 함

-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는 민주적 정치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남녀동수 운동’의 인식 확산이 일상적 정치의 실천과 함께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생활근거지 중심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나 물질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기가 쉽지 않음.
- 정당이 인재를 키우지 않고 구색 맞추기 정도의 할당에도 생색을 내는 지금, 선거 시기에 비례대표직이나 할당제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소극적 정치운동을 넘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치기획을 하고 지역에서 실천을 하는 일상적 정치운동조직이 필요함
-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는 정치참여의 기초단위로서 실험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정치충원의 통로로서 지방선거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지역 활동을 통해 발굴된 역량있는 여성들의 정치진출 모색이 지속되어야 하고, 일상적 활동을 통해 실제 권력의 작동과 민주주의 원리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개인적·집합적 경험 이 축적되어 정치의 힘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함. 그동안 여론주도층이거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무급 자원봉사인력, 동원의 세력으로 여겨져 온 여성들이 생활현장에서 삶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활동을 통해 자치능력을 키우고, 사회변화를 추동해내는 적극적 세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
- 여성의 지역구 출마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지역관여 및 활동에 근거한 정치참여라기 보다는 소속 정당의 혜택을 반영한 수동적 참여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 여성정치참여를 운동의 과제로 설정한다면 여성의 의식이나 문화, 사회적 지원의 전반적 향상 과제 뿐 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정치 및 사회적 제도 변화에도 적극적 목소리를 내야 함.
- 정치활동에 있어 네트워크의 중요성 인식
-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리되 부정적 기능 개선위해서 사회적 여성정치네트워크 구축해야 함. 선거 시기 한시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여성정치네트워크 필요
- 여성의원들간의 연대와 제휴 필요
-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 자신감 회복·적극적 참여 유도, 여성의 부족한 자원과 권한 보충, 정치적 훈련기회 제공, 의정활동 및 지역활동까지 경력지속을 위한 조직적 지원체계 역할, 여성관련 이슈의 의제화,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역할 해야 함.

양성평등 지방자치와 남녀동수 기초의회제 : 타당성 및 과제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양성평등 지방자치와 남녀동수 기초의회제: 타당성 및 과제

이진옥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2017년 3월 17일 옛 충남도청 2층 소회의실

정책엑스포 2017

내용

-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종합 평가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프랑스 동수법의 도입 및 결과
- 남녀동수 의회의 타당성 및 과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논쟁

공천제 폐지 주장

- 현행 공천제 실행의 문제점
 -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증대
 - 공천과정의 부정·비리 유발
 - 후보자와 당원협의회장간의 물밑거래
 - 공천헌금 문제
 - 지방의원 줄 세우기
 - 지역주의 조장 심화 등
- 이러한 공천 부패가 책임정치인 구현이라는 정당정치의 이념 훼손

공천제 폐지 반대 주장

- 공천제 폐지가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지 못할 것
- 자금과 조직 동원을 필요로 하는 선거 특성 상 지방유지 및 토호세력들의 발호 및 정경유착 심화 가능성 우려
- 정당정치는 책임정치 구현의 근간
 - 공천과정에서 최소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검증 과정을 거침.
 - 자질 있는 후보 공천 및 문제 있는 후보에 대해 정당에 책임 물음.
 -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실행한 결과물에 대해 정당에 책임 물음.

사진 1.



6.4 지방선거의 특징

- 공천폐지 논쟁으로 복지 및 지방정책 실종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측 심화
- 공천과정의 지연
-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 침체 및 박근혜 지키기 대 세월호 심판 구도 형성
 - 공천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 결여
 - 정당공천제의 후보자 검증 기능 유명무실
 - 정책이슈의 부재 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 경쟁으로 치환(오승용 2014)

그 결과 ..

- 전체 기초후보 6,119명 중에 전과 3범 이상의 후보자가 595명에 달해 10%를 육박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595명 중에 263명이 정당 소속 후보, 무소속 332명이며, 정당 소속 후보자 중 새누리당 소속이 110명, 새정치민주연합 105명 등에 달한다(한겨레 2014/06/02).
-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고소·고발된 건수는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 지검지청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 고소·고발된 혐의자는 50여명, 수사의뢰를 포함하면 모두 60여명에 달한다(전남일보 2014/6/5).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총 371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 5회 지방선거 당시 224건에 비해 무려 147건, 60%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사례 건수나 위반 수준, 고소고발 형태 등이 역대 최악으로 꼽을 정도라는 게 경남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노컷뉴스 2014/6/5).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정당	광역의회			기초의회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새누리당	595	46	7.7	1,858	278	15.0
새정치민주연합	538	67	12.5	1,356	221	16.3
통합진보당	114	36	31.6	255	98	38.4
정의당	12	2	16.7	94	23	24.5
노동당	68	22	32.4	25	5	20.0
녹색당	3	1	33.3	7	2	28.6
새정치당	5	2	40.0	11		0.0
한나라당				1		0.0
무소속	384	22	5.7	1,770	130	7.3

사진 2.



2010/2014년 지방선거 결과 비교

구분	2010년 선거					2014년 선거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정당	무소속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당	무소속
광역자치단체장	6	7	1		2	8	9		
기초자치단체장	82	92	13	4	36	117	80		29
광역의회 의원	288	360	41	32	36	416	349	4	20
기초의회 의원	1,247	1,025	117	161	305	1,413	1,157	51	277

진보정당(2010) :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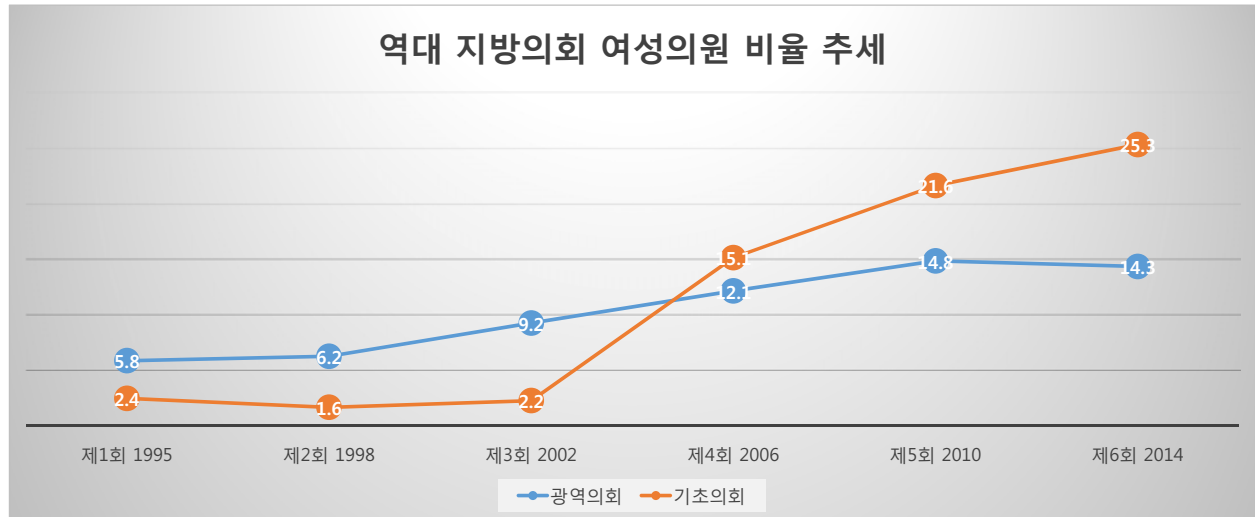
진보정당(2014) :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및 당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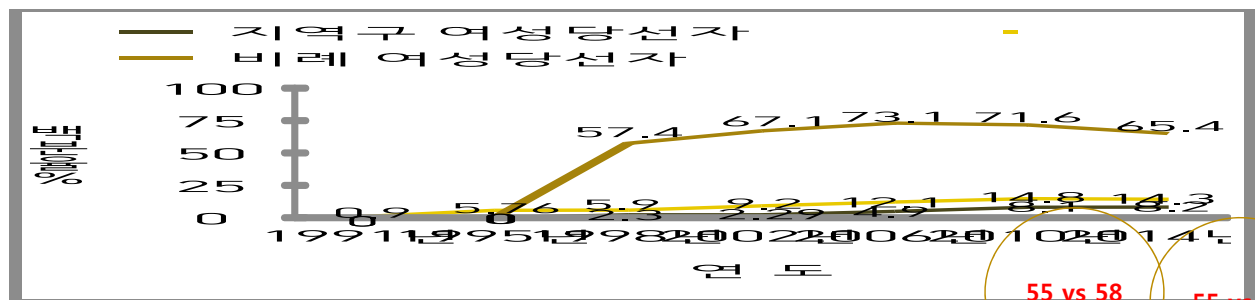
정당	광역의회			기초의회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새누리당	46	25	54.3	278	183	65.8
새정치민주연합	67	33	49.3	221	157	71.0
통합진보당	36		0.0	98	11	11.2
정의당	2		0.0	23	5	21.7
노동당	22		0.0	5	1	20.0
녹색당	1		0.0	2		0.0
새경치당	2		0.0			
무소속	22		0.0	130	12	9.2
합계(여성)	198	58	29.3	757	369	48.7
남성	1,521	647	42.5	4,620	2,150	46.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태홍(2014: 15)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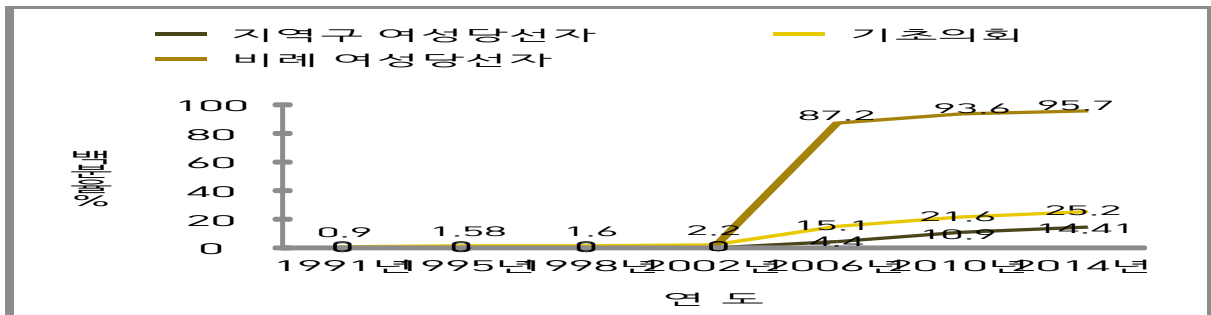


연도별 광역의회 여성당선자 비율 추이



광역의회	1991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지역구 여성당선자			2.30	2.29	4.90	8.10	8.20
비례 여성당선자			57.40	67.10	73.10	71.60	65.40
광역의회 총 여성당선자	0.90	5.76	5.90	9.20	12.10	14.80	14.30

연도별 기초의회 여성당선자 비율 추이



기초의회	1991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지역구 여성당선자					4.40	10.90	14.41
비례 여성당선자					87.20	93.60	95.70
기초의회 총 여성당선자	0.90	1.58	1.60	2.20	15.10	21.60	25.20

여성 관련 지방선거제도의 변화

연도	법개정 주요 내용	강제수준
1995	광역의회의원의 10% 비례대표 선출 방식 도입	
2002	비례대표 정당명부에 대한 직접투표제 도입	광역의회비례 대표 위반시 등록무효 광역의회30% 공천시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광역의회 비례대표후보의 50%여성할당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매 2인마다 여성 1인 포함	
	광역의회 지역구 후보공천에 30%여성할당 권고	
2006	기초의회를 정당공천제로 전환	위반시 수리불허 및 등록무효 대상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로 확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시 여성을 홀수 순번에 배정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제 도입	
2010	지방의원선거에서 지역구 당 1명이상 여성의무공천	위반시 등록무효 (군지역제외). 단 후보총수가 의원정수 50%미만인 경우는 제외

경기도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비교

(단위 : 명 %)

지역	민선 5기					민선 6기					여성의원 비율 증감
	총 인원	여성 의원 소계	지역구 여성 (전체)	비례 여성 (전체)	여성 의원 비율	총 인원	여성 의원 소계	지역구 여성 (전체)	비례 여성 (전체)	여성 의원 비율	
수원시	34	7	5(30)	2(4)	20.6	34	11	8(30)	3(4)	32.4	+11.8
성남시	34	6	4(30)	2(4)	17.6	34	7	4(30)	3(4)	20.6	+3.0
의정부시	13	6	4(11)	2(2)	46.1	13	5	3(11)	2(2)	38.5	-7.6
안양시	22	6	3(19)	3(3)	27.3	22	9	6(19)	3(3)	40.9	+13.6
부천시	29	10	7(26)	3(3)	34.5	28	8	5(26)	3(3)	28.6	-5.9
광명시	12	4	2(10)	2(2)	33.3	13	5	3(11)	2(2)	38.5	+5.2
평택시	15	3	1(13)	2(2)	20.0	16	4	2(14)	2(2)	25.0	+5.0
양주시	7	1	0(6)	1(1)	14.3	8	1	0(7)	1(1)	12.5	-1.8
동두천시	7	2	1(6)	1(1)	28.6	7	2	1(6)	1(1)	28.6	0.0
안산시	21	5	2(18)	3(3)	23.8	21	6	3(18)	3(3)	28.6	+4.8
고양시	31	11	8(28)	3(3)	35.5	31	11	8(27)	3(4)	35.5	0.0
과천시	7	2	1(6)	1(1)	28.6	7	6	5(6)	1(1)	85.7	+57.1
의왕시	7	1	0(6)	1(1)	14.3	7	2	1(6)	1(1)	28.6	+14.3
구리시	7	3	2(6)	1(1)	42.8	7	4	3(6)	1(1)	57.1	+14.3
남양주시	14	4	2(12)	2(2)	28.6	16	2	0(14)	2(2)	12.5	-16.1
오산시	7	3	2(6)	1(1)	42.8	7	2	1(6)	1(1)	28.6	-14.2
화성시	17	5	3(15)	2(2)	29.4	18	5	3(16)	2(2)	27.8	-1.6
시흥시	12	4	2(10)	2(2)	33.3	12	6	4(10)	2(2)	50.0	+16.7
군포시	9	1	0(8)	1(1)	11.1	9	2	1(8)	1(1)	22.2	+11.1
하남시	7	4	3(6)	1(1)	57.1	7	3	2(6)	1(1)	42.9	-14.2
파주시	11	3	1(9)	2(2)	27.3	14	6	4(12)	2(2)	42.9	+15.6
여주시	7	1	0(6)	1(1)	14.3	7	2	1(6)	1(1)	28.6	+14.3
이천시	9	2	1(8)	1(1)	22.2	9	3	2(8)	1(1)	33.3	11.1
용인시	24	5	3(22)	2(2)	20.8	27	10	7(24)	3(3)	37.0	16.2
안성시	9	4	3(8)	1(1)	44.4	9	2	1(8)	1(1)	22.2	-22.2
김포시	8	2	1(7)	1(1)	25.0	10	2	1(9)	1(1)	20.0	-5.0
광주시	8	3	2(7)	1(1)	37.5	9	3	2(8)	1(1)	33.3	-4.2
포천시	8	2	1(7)	1(1)	25.0	8	1	0(7)	1(1)	12.5	-12.5
연천군	7	1	0(6)	1(1)	14.3	7	2	1(6)	1(1)	28.6	+14.3
양평군	7	1	0(6)	1(1)	14.3	7	2	1(6)	1(1)	28.6	+14.3
가평군	7	1	0(6)	1(1)	14.3	7	1	0(6)	1(1)	14.3	0.0
합계	417	113	64(364)	49(53)	27.1	431	135	83(376)	52(55)	31.3	+4.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에서 재구성.

지방의회 공천받는데 필요한 요인

구분	응답자			
	결정적 요인(의원 본인)		필요한 요인(여성의원)	
	1순위	1+2+3순위	1순위	1+2+3순위
여성 의무 공천 제도	45.3	62.7	66.7	76.0
여성 가산점 제도	1.3	10.7	2.7	42.7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		1.3	1.3	10.7
공천심의위원회	1.3	12.0	1.3	9.3
시도당위원장의 지지	1.3	6.7		4.0
당(지구당등)협의회위원장의 지지	4.0	18.7	1.3	17.3
당원 지지	8.0	21.3	1.3	16.0
유권자의 인지도	8.0	30.7	10.7	30.7
당내 소속계파의 영향력				1.3
소속 정당에 대한 기여	12.0	38.7	5.3	21.3
조직력	1.3	12.0		10.7
자금력				1.3
직업적 전문성 및 경력	5.3	25.3	5.3	21.3
시민단체 활동 경험 및 실적	4.0	20.0		16.0
학력		1.3		
연령		2.7		1.3
기타	1.3	4.0		
무응답	6.7	6.7	4.0	4.0

양민석(2015: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화	비례대표 확대 및 여성할당 강화	여성명부제	여성(전용)선거구제	남녀동반선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50% 및 홀수번호 부여 의무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 의회의원 선거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강제이행 조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공천패지를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로 분리 적용 현행 비례대표 정수를 각급 의회 의원 정수의 10%대→30%이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당 명부를 무소속 여성명부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선거구를 여성만 출마하는 여성 전용 선거구로 선정, 여성끼리 경합하여 다수표를 얻는 여성이 당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남성 후보 1인과 여성 후보 1인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고, 다수표를 얻은 남성 1명, 여성 1명을 선출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의 영향력 배제와 논리적으로 모순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들만의 경쟁구조를 형성시켜 여성을 정치적 소수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음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법이 보장한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 여성전용선거구가 아닌 지역구에 입후보한 여성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저하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고,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다는 기본원칙에 위배 여성후보자 수 부족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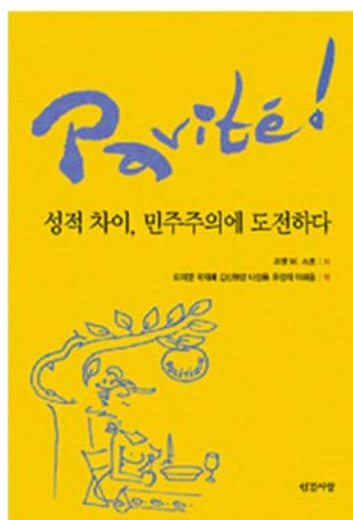
여성이란?

-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 시몬 드 보부아르
- 엄밀히 말해 '여성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줄리아 크리스테바
- 여성은 하나의 성을 갖지 않는다. - 루스 이리가레
- 섹슈얼리티의 전개는 (...) 오늘의 성관념을 만들어냈다. - 미셸 푸코
- 성의 범주란, 이성애적 사회에 기초한 정치적 범주이다. - 모니크 위티그

저조한 프랑스의 여성 참여

“1970년까지 프랑스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심이 없었던 배경에는 프랑스 페미니즘의 성격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김민정 1998). 프랑스 페미니즘이 가지는 급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제2기 여성운동기간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보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남녀차별에 주목해왔고 여성의 경제적 자유, 성적 자유, 그리고 문화적인 자유에 집중해왔다(Touraine 1982). 따라서 공공영역과 권력에 대한 참여 문제는 오랫동안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심지어 반(反)의회주의를 표방하는 여성단체들도 있었고(Duby, Perrot 1991, 180-186) 정치참여에 관심을 보인 단체들은 남성들의 간택을 기대하는 ‘개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또한 공산주의 여성단체들은 정치참여에 관심을 둔 여성단체들을 저임금과 성적 학대 및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일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은 제쳐 둔 채 자신들의 정치적 성공만을 생각하는 부르주아 페미니즘으로 매도했다(Jenson 1990).” - [김민정, 2012: 26~27]

여성시민에게 권력을! 자유, 평등, 동수(parité)



프랑스 동수법의 도입

- “명부식 선거의 경우에 각 후보명부에서 각 성의 후보자의 수 차이가 한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공천된 남녀후보는 동수이어야 한다”
- 이 선거법 264조, 300조, 346조, 370조, 331-2조 개정
- 유럽평의회, ‘동수민주주의’(parity democracy): 남녀의 수적 평등이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만든다 (Council of Europe 2000, 77).
- 시몬느 베이유 전 장관과 에디트 크레송 당시 총리가 참여, 아테네선언문에 서명 - “민주주의는 국가의 대표와 행정에 있어서 동수를 필요로” 한다.

프랑스 동수법 도입 이후

	1983	1989	1995	2001	남녀동수법 적용
평균	14.0%	17.2	21.7	33%	
3500명이하	12.9	16.3	21.0	30.05%	적용안됨
3500-9000명	21.0	21.4	25.1	47.4	적용
9000-30000명	22.0	23.0	26.3	47.3	적용
30000명 이상	22.8	23.6	26.9	48	적용

표. 프랑스 시의회 여성의원비율의 변화

	시집행부의 여성의원비율		여성시장비율		여성시의원비율	
	1995	2001	1995년	2001년	1995	2001
3500명이하	21.0%	30.05%	2%	3%	23.6%	25.2%
3500명-9000명	25.1%	47.4%	7%	8.5%	29%	47.7%
9000명-30000명	26.3%	47.35			27.6%	41.2%
30,000명-100,000명	26.9%	48%			21.5%	36.3%
100,000명이상					31.6%	45.9%

표. 프랑스 시 집행부에서의 여성비율변화

* 출처: 프랑스 내무부 자료(2001) [김민정(2012: 39-40에서 재인용)
http://www.interieur.gouv.fr/elections/dossier_presse/election_municipal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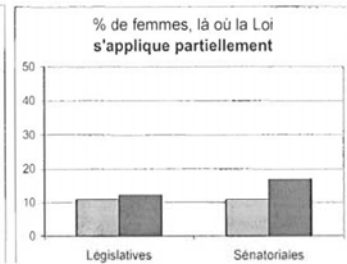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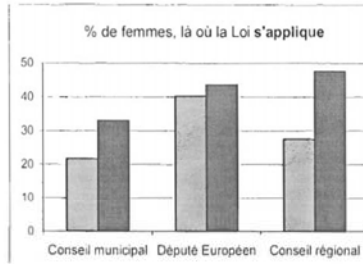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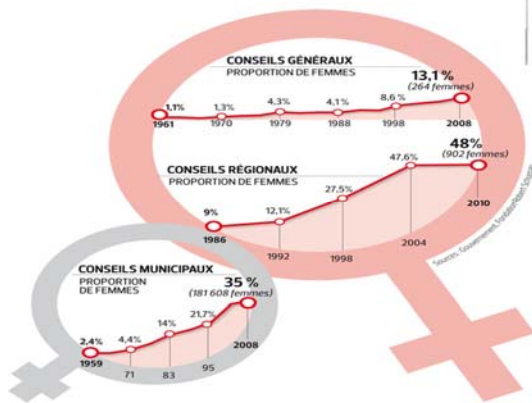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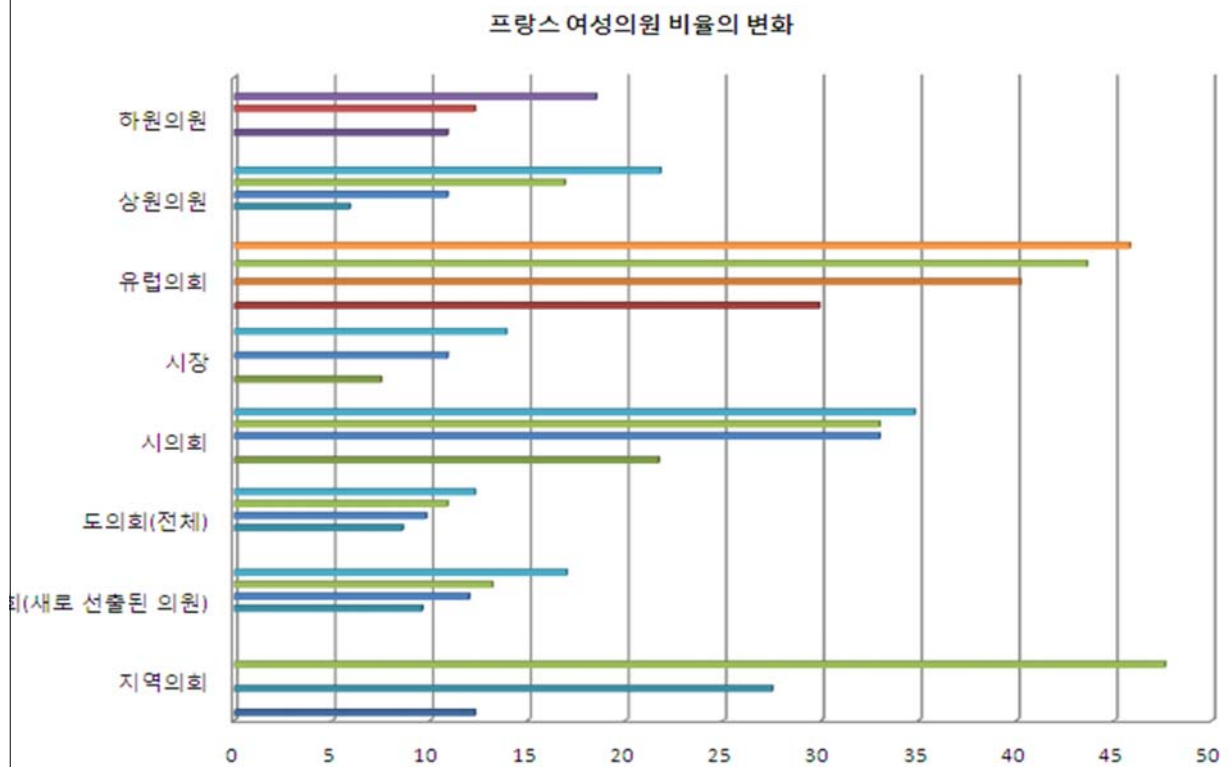


그림 위:
동수가 적용된 선거(좌), 동수가 부분 적용된 선거(우)



프랑스 남녀동수제 이후 여성의원 수의 변화

	1999년 (남녀동수제 적용이전)	최근 선거	선거일시
남녀동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거			
3500명 이하의 시의회	21%	32.2%	2008
시장(모든 도시)	7.5%	13.8%	2008
도시 공동체의장	5.4%	7.2%	2008
도의회	1%	4%	2010
지역회의의장	11.5%	7.7%	2010
남녀동수제의 부분적인 혹은 간접적 효과를 가진 선거			
도의회	9.2%	13.9%	2008/2011
하원	10.9%	26.9%	2012
상원	5.3%	22.1%	2008/2011

	1999년 (남녀동수제 적용이전)	최근 선거	선거일시
남녀동수제의 의무 적용을 받는 선거			
3500명 이상 주민의 시의회	21.7%	48.5%	2008
3500명 이상 주민의시의회 시장 및 보좌진	25%	48.2%	2008
지역의회	27.5%	48%	2010
지역의회 부의장	15.1%	45.5%	2010
유럽회의의원	40.2%	44.4%	2009

출처: 남녀평등고위위원회(HCEH), Guide de la parité, p.15.

김민정(2015) 「프랑스 동수법과 양성평등」, 『젠더리뷰』 봄호, 77~78쪽.

의원 성향의 변화

- 의원 평균 연령의 감소
 - 전체 시의회의원의 평균 나이가 57세인데 비해 여성의원의 평균 나이는 46세
 - 전체 시의회의원의 평균 나이가 57세인데 비해 여성의원의 평균 나이는 46세
- 사기업 회사원, 무직 또는 학생의 의원직 진출 증가
 - 사기업 회사원 출신은 남녀 비슷
 - 여학생 699명 vs 남학생은 355명
 - 무직인 여성의원은 전체의 21.89% vs 남성의원 중 무직은 8.5%

Le Monde, 2001년 5월 29일자, 김민정(2012: 45)에서 재인용

동수 - 인간 종의 이원성

- “남녀동수를 가지고 여성들은 단지 여성 개인이 되려는 것이었고, 또 그들의 개인성에 의해 국가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되려고 한 것이었다. 남녀동수 지지자들은 여성이 오직 여성만을 대표할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공직에 선출된 모든 여성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주장했다. 즉 여성은 남성처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들만큼이나 여성들 역시 다양한 의견과 판단을 가진다는 것이었다”(스콧, 2009: 113~114).

참고문헌

- 김명숙(2015)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참여 현황과 확대방안 -지방선거 참여를 중심으로」 『大韓政治學會報』, 23(2).
- 김민정(2012) 「 할당제의 의미 및 프랑스의 할당제」, 『15%보다 뜨거운 평등 30%보다 절실한 민주주의』, 한국여성민우회 주최 긴급토론회 발제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012년 2월 29일.
- 김민정(2015) 「프랑스 동수법과 양성평등」, 『젠더리뷰』 봄호, 70~82쪽.
- 박영애 안정화김도경(2011) 「 기초의원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입법 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21(1).
- 안성호(2015) 「6·4지방선거 여성후보자공천 문제점과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 충북지역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2(1).
- 양민석(2015) 「여성의 지방의회 정치참여 영향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31(3): 203-231

- 엄태석 2010 여성의 정치 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양시 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3(1)
- 이진옥(2014) 「6.4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선거경험 연구」,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신라대학교, 2014년 11월 22일.
- 이혜숙 2014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성평등 의식: 경남지역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0(1)
- 조앤 W. 스콧 지음, 오미영 외 옮김 (2009) 『성적 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인간사랑
- 하영애(2013) 「외국의 지방의회와 선거제도: 기초의회 남녀동석당선제도 제의」, 『선거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1-17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2014년 지방선거와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KWDI Brief』, 25
- 황아란서북경(20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 『선거연구』 1(1)